

국가통치 '기초' 새로 세워야 한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전체 사회의 변화는 의식 속에 자리 잡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필연과 드라마의 쌍곡선의 역임으로 이루어진다. 메르스 사태를 놓고, 필연과 드라마로 구별해 본다면 어떤 설명이 될 것인가. 메르스 사태 자체는 어느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드라마임에 틀림없는데, 그것이 현재의 시점과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필연조건을 떠나서 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

경제발전 위한 행정조직 효과 끝나

현재의 모든 드라마는 한국사회가 산업기술사회라는 필연 조건을 떠나서는 예방조치나 치유조치가 제대로 설정되기 어렵다. 메르스가 농경사회에서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문제규정이나 대처방법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 틀림없다. 당연한 이 얘기가 새삼 제기되어야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서이다. 메르스 통제는 지금의 한국사회구조에서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통치기능과 관련된다.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조야에서 호통을 치며 해당부처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등은 일상적 감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앞으로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는 드라마에 대해 계속 이런 식으로 가 본들 문제는 문제대로 남게 되고 해결은 쉬이 찾기가 어려울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을 되돌아볼 필요는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한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시동을 걸었을 때, 행정기구도 그 국가적 목적에 따라 구성되었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조직의 효과는 1990년대 전반에 와서 종결되었다. 이 이후로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조직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기술 사회의 조건에 알맞게 재구성되어야 했으며 국가적 정책방향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했었다. 자동차가 생활도구가 되면서 아스팔트길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통통제나 법규가 새로 만들어져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이다.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원로회우)



해마다 어인 일이고?

메르스 충격파

특별기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

重商주의 행정조직 산업기술사회 안맞아

여의도 政治部族들 효과적 통치 막아

대통령 지도력 발휘 국민선택 나서야

전체 통치수단의 재조직화는 아쉽게도 수십년 동안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 중상주의적 체제에서 공공서비스 체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에 버금가는 어떠한 드라마도 쉬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에서 빚어진 혼란은 무엇 보다 먼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선 당장에 의회는 어느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사태해결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했었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치부족들의 휴전에 불과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국의 지금 정당들 모습은 정치부족들의 오합이다. 어느 부족이 어느 부족을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 더하여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어떤 효과적인 통치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더욱이 국회법개정 드라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바로 정치체제 변화의 시도에 해당하는데, 이른 바 메디슨이 말하는 '선거제적 전제체제', 또는 프랑스에서 말하는 '회합 체제'에 대한 시도'에 해당한다. 이런 제도적 조건하에서 산업기술사회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통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관료세계 변혁 등 통치수단 정비해야

그나마도 사회를 이끌고 지도해 나가야하는 존재는 지금 대통령 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도 이제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되는 통치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에 일부 부처들이 분리되어 있어 효과적인 행정을 기대하기는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사정이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메르스 사태 때문에 미국방문을 연기해야 했다면, 의당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을 이끌어야 했던 것인데도, 그 설득권력조차 행사하지 않았다. 그 권력은 힘이자 의무이다. 지역의 대표가 아닌 전 국민의 대표로서의 대통령은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통치체제 전체에 대한 상징성마저 크게 훼손시켰다.

이런 상태에서 재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상정해 본다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에 못 미치는 이른바 4대 개혁이라는 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개혁안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가를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설명하고 이 해시키는 정도라도 해야 함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무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역사적 필연조건에 알맞은 기초조건을 서둘러 만드는 노력을 해야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여의도 정치판을 이끌며 통치가능한 수단의 정비를 시작해야한다. 이에

관료의 변혁도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부족들의 싸움에 가려 관료세계는 무풍지대에서 지내 온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에만 얽매다 보면 헤어날 길이 없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메르스는 단순한 역병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몇 차례 유사한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위기의 극복노력을 자랑스레 말해 왔으면서도,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 사회와 국가의 기초조건(fundamentals)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온 일이 별로 없다. 또다시 이를 미루고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유언비어 차단, 철저히 다스려야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메르스의 공포 분위기는 해외에도 전달돼 10여만 명이 한국 관광을 취소하고 유니버시아드에 유명 선수가 불참을 통고하는 등 인명 손실 이외에 국제 신인도 저하의 후유증을 낳고 있다. 방미를 연기한 박 대통령이 마스크도 안 쓰고 불비는 동대문시장에서 상인을 격려한 것은 내외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국가위상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지만 추경이 필요할 만큼 메르스의 타격은 컸다.

메르스는 재난만 생기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억측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일부 안티 세력과 추종자들, 종북 매체에 호재였다. 정부는 악성 유언비어를 단속한다고 했으나 메르스가 미군의 탄저균 탕이라는 유언비어 뉴스와 블로그 등이 쉽게 검색됐다.

주한미군기지 탄저균 배달과 관련된 유언비어는 미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종북매체 위주로 퍼졌다. 미 국방부는 “유타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미국 9개 주로 옮겨졌다. 탄저균 표본 1개는 한국 오산 주한미군의 합동위협인식연구소로 보내졌으며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좌경 매체들은 반한 인사 등의 기고를 동원해 메르스와 연결시켰다. 대법원의 폐간 결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주민보’는 광주에서 ‘자주시보’로 등록해 정부와 주한미군을 공격 중이다. 북한 무기 개발과 전쟁훈련은 찬양하면서 이를 억지하려고 제독 연구를 하는 주한미군은 헐뜯고 몰아내자고 활개친다.

대체로 메르스 확산 초기 유언비어는 어느 병원에 감염자가 있는가라는 SNS 상의 병원 정보로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감염원에서 멀어지고 싶은 자구적 노력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보도 매체가 허둥대고 삼성병원을 포함한 병원 유언비어가 한창일 때 메르스 확산 지도를 만든 정보통신인의 노력은 유언비어 불식을 넘어서는 값진 시민운동에 해당된다.

사회連帶性 무시한 ‘현대판 마녀사냥’

일부 지자체와 지각없는 시민들이 메르스와 무관한 특정 병원, 백화점, 의사, 학교, 학생을 메르스 환자로 연결시키거나 수십 명의 감염이 증명하듯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그 가족을 요주의자로 실명 공개한 것은 민주 사회의 연대성을 부정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4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35번 환자인 서울삼성병원 의사가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1,565명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언했다. 박시장은 메르스를 준전시상황이라고 했다. 재건축 참석자 중 환자는 안 나왔다. 현직 의사가 공동대표인 의료혁신투쟁본부는 박 시장이 의사의 인격을 살해하고 공포심을 증폭했다며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시의 포고령은 유언비어 단속이 핵심이다. 시민이나 군부대가 포로가 된다는 식의 오판이나 공포 유발은 패전의 패닉을 부추기는 전쟁 수행의 장애물이다. 재건축은 구나 시의 행정 행위이니 호들갑스럽지않게 초대형 집회인 조합원 총회를 연기시키면 될 일이었다. 스스로 메르스 서울방역대책본부장이라는 박시장은 산하 서울의료원 진료부장이 메르

메르스 충격파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美탄저균 연결

좌파매체 정부공격

朴서울시장 심야회전

공포심부추기기 一助

‘알권리’ 내세운 선동

더이상 용납안돼

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서 오는 환자를 받지 말라는 이메일을 동료들에게 보낸 것을 알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그의 지지도는 올라갔다.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긴급재난 1호 상황이라고 보도했다”라든가 개발되지도 않은 메르스 백신을 팔려는 의도라는 것, 박 대통령이 중동에서 낙타고기를 먹은 탕이라는 유언비어도 나왔다. 동국대 경주병원이 국가격리병원으로 지정될 때 20억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메르스 환자를 받아 들였다는 루머가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무분별한 과장이 유언비어 양산

치사율 40퍼센트라는 언론의 무분별한 과장과 초기의 환자 동선 보도 미흡은 시민들을 신종 전염병 앞에서 떨게 했다. 메르스 확산의 핵심은 1호 환자가 여행 경유국을 숨겨 방역망을 뚫고 이리저리 다닌 데 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멕시코를 다녀온 수녀는 감염이 의심되자 두문불출로 확산을 막고 당국에 신고해 방역에 기여했다는 점이 새삼 평가되었다.

근거 없는 정보를 보자마자 전파하는 게 좋다고 보는 시민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질서는 혼탁해진다. 정부가 오염 병원 정보를 저울질하며 우물쭈물해 환자의 초기 동선 공개를 놓침으로써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호언하던 삼성병원은 타 병원의 환자 정보제공 지연 등의 불운도 겹쳐 불명예스런 대량 발생의 근원지가 되었다. 왜 감염 병원 공개에 녹장을 부렸는지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 유언비어에 왜 관대한가

유언비어는 시민만 탓할 게 아니다. 그간 사법부는 우리사회 초대형 이슈의 유언비어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대법원은 MBC가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크다는 허위보도”로 세상을 뒤흔든 사건을 정정 보도판결로 끝냈다. 세월호 사고 때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전원구조라는 초대형 유언비어를 SNS로 날리자 확인 없이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윤창중 사건 때 재미 사이트인 ‘미시유에스 에이’는 엉덩이를 만진 것을 성폭행했다는 유언비어 게시물로 뺨 튀겨 SNS에 불을 질렀다. “민간잠수부가 세월호에 갇힌 생존자와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했다. 해경이 민간구조대의 선내 진입을 막았다”며 유족과 국민을 두 번 울린 소위 ‘가짜 잠수부’ 허위 인터뷰는 종편TV MBN이 보도했었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흥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 서도 면죄부는 아니라고 했다.

국민에게 전혀 낮은 상황에서는 진실의 전달이 가장 절실하다. 공공의 안녕은 개인의 거짓된 유언비어를 알권리라고도, 수용자 각자가 판단할 표현의 자유라고도 격상하여 인정해줄 수 없다. 지금까지 유언비어에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기에 우리 사회의 수준은 너무 낮다. 언론도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유언비어 정복은 갈 길이 멀다. 정부의 비밀주의도 배격되어야 한다. 국민이 협조해야 메르스가 퇴치되는 만큼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4]

우리도 대통령이 버린 그 ‘누구’인가

6월! 그리고 2002년의 ‘연평해전’!

그 6월에 영화 ‘연평해전’이 상영되어 우리를 울린다. 그 용사들은 왜 죽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국가란 무엇인가.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박동혁의 어머니는 이 영화를 보고 “우리는 대통령이 버린 군인의 부모”였다고 한탄했다. 우리 장병 여섯명이 전사했고 많은 장병이 부상당해 고통을 받아야했던 국가적 엄중한 사태를 외면하고 ‘연평해전’ 다음 날 월드컵을 보러 일본으로 간 대통령. 이를 두고 그 이상의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우리도 대통령이 버린 그 ‘누구’는 아닌지?

정창기 (편집위원)

‘100자 발언개’

참 언론인

무슨 명목이든 상(賞)을 받는다는 것은 수상자에게는 영광이자 기쁨이고 주는 사람도 보람찬 일임에 틀림없다.

최근 참 언론인이란 거창한 이름의 언론상 시상식에 대한 기사가 각 수상자가 속한 매체에 게재됐다.

그런데 신문사든 방송사든 기사에 자사 수상자 한 사람만 수상한 것처럼 기사가 나와 어느 한 매체만 접한 독자와 시청자는 이름 그대로 ‘참 언론

인’으로 단 한 사람이 선정된 것으로 알기 쉽다.

실제로는 10여명의 언론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는데도….

참 언론인이 해마다 부문별로 10여명씩 나온다는 게 경사일까.

언론유관단체가 하도 많다보니 언론상 인플레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언론상을 좋아하는 기자들과 언론상 인플레가 황색 저널리즘 경향과 연관되는 것은 아닌지.

오건환 (기획조정위원장)

불신, 불만, 불안 악순환 끊어내자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지난 6월 우리 사회는 중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가 번져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홍역을 치렀다. 아직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메르스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메르스를 둘러싸고 조성된 공포 분위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본질 왜곡과 문제 발전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개인이나 어떤 조직 정부할 것 없이 우리는 큰 일이 터지면 허둥지둥 우왕좌왕 하느라 출구도 못 찾고 해매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기 일쑤다.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못하고 어디는 좀 낫고 못하고를 가릴 것도 없이 그런 경향이 우리들 대부분의 부족한 점이었요 반드시 고쳐야 할 약점이다.

본질외면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가

위급사태에 대처하는 법령과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다. 전담 부처가 없어서도 아니다. 작년 말에는 재난을 전담하는 국민안전처까지 신설 발족되지 않았는가.

재난분야 뿐 아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든 일단 일이 터지면 즉각 대처할 만큼 충분히 훈련되지도 않았고 적극적 효과적으로 최초의 조치를 취할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 일이 벌어지면 현장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에 앞서서 위에 보고하고 지시받느라고 초기 진압시기를 놓쳐 버리기 쉽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하다.

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때는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힘을 모으고 협조해서 어려움 극복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큰 일만 터졌다면 관계부처와 관계자들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여론의 못매를 맞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된다. 협조는커녕 제대로 일을 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문제의 본질보다는 선동꾼들과 저급한 정치인들이 달라붙어 문제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며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데 열을 올리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버렸다.

불끄기보다 부채질·기름붓기 나서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사건 때 보았듯이 기회만 있으면 일을 크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려는 음모가 조직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때 보면 일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있다.

집안에 불이 났다고 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우선 불부터 끄는 것이 상식 아닌가. 불부터 끄고 나서 파질 것을 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냐, 누구 책임이냐... 탓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불난데 부채질하거나 심지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다.

그래서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큰일을 겪고 난 뒤에는 오히려 상

메르스 충격파



이석희

·본회 논설위원
·전 KBS 보도국장

정치권-일부언론 정권 공격에만 몰두

대한민국 혼드는 조직적 음모 방불

낭설-괴담 퍼뜨리는 불순세력 척결 시급

호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 앙금만 쌓인다. 종편방송과 일부 정치인들의 부풀림과 부추김으로 메르스 관련 괴담이 증폭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던 것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시 가까운 깊은 밤 시간에 긴급기자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메르스 방역본부장 박원순입니다”하고 긴박감을 주면서 비상 상황에 임하는 자신의 기민함을 과시하는 듯한 선전 공세를 펴는 과정에서 나라 전체가 메르스 소굴이 돼 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은근히 정부 당국을 깎아내리는 투의 발표를 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이 나라에는 국가 국민 사회 전체를 생각하기 보다는 무턱대고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을 탓하며 정권을 흔드는 것을 정치의 본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정치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일들이 경제, 해외수출, 국격 손상으로 작용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끼치고 있지 아니한가.

무슨 일만 있으면 반 정부 반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며 혼란과 분열을 피하려는 불순분자들이 날뛰며 세력화하려 든다. 마치 이 나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듯한 비국민들이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를 농락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얼굴두꺼운 논객들 해악 정도 지나쳐

아무 문제나 멋대로 떠들어 대는 얼굴 두꺼운 논객들이 전문적인 식견도 없으면서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쪽에 서서 불안을 조성하며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종편방송의 해악도 그 도를 지나친지 오래다.

일이 터지면 우왕좌왕 하느라고 출구도 못 찾고 해매는 공무원들,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무원들을 질타만 하는 언론,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권, 정치와 사회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날뛰는 불온세력...

그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했지기 시작하면 SNS 등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괴담과 엉터리 정보들을 확산시켜 사회적 불만과 불안 조성에 편승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패턴이 돼버렸다.

그런 패턴이 뱅뱅 돌아가며 정부불신, 사회불안, 정치경멸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표 얻을 생각에 당장은 시원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국민을 속이려는 사기꾼 같은 정상배들은 없어져야 한다. 자극적인 보도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려 수지타산 맞출 궁리만 하는 장사꾼 같은 방송 신문은 돈 벌 생각을 버리든지 걷어치워야 한다.

‘나라 바로 세우기’는 대한언론이 캠페인 하고있는 ‘언론과 정치 바로 세우기’부터 시작돼야 한다.

'100자 발언권'

안보 차원의 방역 시스템

메르스의 불안이 진정될 것 같으면서도 꼬리가 잘려지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적의 정제조차 모르고 전투를 시작했던 격인 메르스 사태의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외양간이라도 튼튼히 고쳐놓아야 할 터.

국가안보차원의 방역시스템 구축은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도 이참에 다시 생각해 볼 일.

윤재홍 (논설위원)

가뭄에 4대강 물 왜 못쓰나 했더니

온 나라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평년 대비 39% 수준으로 소양강댐 저수율이 42년 만에 최저치란다. 곳곳에 논바닥이 거북등이 되고 밭작물은 타죽고 일부 산간·도서지역은 식수도 모자란단다. 한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다. 왜 4대강 물을 가뭄 때 쓰지 못할까? 당초 4대강 사업은 본류에 이어 지천도 정비해 관개수로를 만들어야하는데 국회가

예산을 전액 깎는 바람에 후속사업을 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 국회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 횡방꾼인가?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

소환, 공개-비공개 기준 원지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지난달 24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개입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출석과 귀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의 공개 소환과 대조적. 공개-비공개 소환 기준이 뭔지 ‘아리송’.

이규섭 (편집위원)

전염병 방역체계 대대적 혁신을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중동 낙타는 대한민국 방문이 초행길인데도 어쩔 그렇게 한국 의료 사막 지대만 콕콕 찍어서 지나갔을까. 신통력이 대단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얘기다. 지나고 나면 메르스 사태는 필연으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 제도와 문화가 전염병에 적나라하게 취약했던 것이다. 메르스를 계기로 전염병 방역체계를 일신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발생 과정을 따라가며 그 문제와 해결책을 짚어 보자. 메르스 1호 환자가 지난 5월 4일 중동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기내에서 중동지역 전염병 메르스와 관련된 아무런 얘기를 접하지 않았다. 메르스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으며, 1400여명의 환자가 생겼고, 현지의 치사율이 40%라고 하는데 발열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기내 방송이 없었다. 공항에는 안내문도 없었다. 하루 7만명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천공항 검역소는 뭐했나 싶다.

1년전 이미 대규모 감염 가능성 경고

1년 전 질병관리본부 주관 전염병 포럼에서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국내 메르스 유입으로 대규모 감염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말이다. 전염병 전문가가 말아야 할 인천공항 검역소장직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좀 쉬었다가 가는 자리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호 환자는 발열 상태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녀도 중동에 다녀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의사들도 묻지 않았다. 이제 인천검역소장만큼은 전염병 전문가가 말아야 한다. 해외 전염병 정보는 상시로 체크되어 수시로 대국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사스와 신종플루를 거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료인에게 내린 지침이 있다. 발열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환자에게 마스크부터 씌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1호 환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평택성모병원을 돌아다녔다. 슈퍼 전파자 14호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응급실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나온다. 이를 환자도 심각히 여기지 않았고, 의료진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제 발열, 기침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씌워야 한다.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국내 첫 메르스로 진단됐고, 국가 지정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정부는 메르스 유입을 발표하고, 공기 전염이 아니라 환자 밀접 접촉으로 옮겨지니 일반인은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3일 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동 입국자 검역을 점검한다며 공기 속 바이러스도 차단한다는 N95 마스크를 쓰고 인천공항에 나타났다. 복지부는 메르스 1호 환자 주치의의를 인천까지 불러 장관 옆에 세웠다. 국내 첫 환자 치료에 몰두해야 할 임상 의사가 검역 점검에 동원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연금 전문가인 복지부 장관의 말씀을 받아 적는 분위기 속에서 장관 옆에 앉았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 통제 최고 전문가이자 방

메르스 충격파

특별기고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논설위원

인천공항 검역소장
의료전문가가 말아야

질병관리 본부장에
軍警동원요청권 부여

역학조사관
정규직으로 양성해야

역사령관 아닌가. 그 시간 그는 1호 환자가 머물렀던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 현장을 쟁겼어야 했다.

이제는 현장에 있는 방역사령관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처럼 군인, 경찰 동원 요청권도 갖고, 금융회사를 움직여 감염자의 행적 추적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처 조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호 환자가 머물렀던 병실은 설계된 것과 달리 환기구도 없는 짙은 공간이었다. 그렇게 병실 구조를 허가 없이 바뀌도 되나 싶다. '바이러스 온실' 병실에서 4명이 메르스에 감염됐다. 그중 한 명은 역학조사 대상에서 빠져 중국으로 가버렸다. 얼마나 역학조사가 허술했으면, 환자를 간병하던 가족을 방역 대상에서 빠뜨릴 수 있나. 우리나라 역학조사관 32명 중 30명은 군대 대신 가는 공중보건 의사다. 방역 최전선 요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은 2년씩 훈련해 역학조사관을 키운다. 한국은 2주 훈련받고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규직으로 역학조사관을 대거 양성해야 한다.

신고없이 병원이동땐 건강보험 적용 말아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슈퍼 전파자 14호 환자는 1호 환자가 있던 평택성모병원 병동에 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줄도 모른 채 평택의 다른 병원을 들렀다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갈아탈 때는 의료진끼리 정보 교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 환자가 왔는지 감감이다. 이제 아무런 신고 없이 환자가 병원을 이동할 때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전국 환자 집합소였다. 대형병원 선호 현상으로 늘 초만원이고, 격리 병상은 태부족이다. 이번 사태는 그렇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80여명이 집단 감염돼 전국으로 흩어져 사달이 났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실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국내 건강보험은 다인실 위주로 운영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하게 하다 보니, 간병인은 대개 가족이다. 누군가 아프면 너도나도 문병을 온다. 누가 문병을 온 지 기록도 없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간병 가족과 문병객이 메르스에 대거 감염됐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들이 돌아다녀 메르스를 퍼뜨렸다. 병원을 간호사 포괄 간병 시스템으로 혁신하고 그런 비용에 돈을 써야 할 때다. 언제까지 후진적 병원 생활을 할 수는 없다. 문병객 통제를 공한 수준으로 해야 감염이 관리된다.

메르스로 대한민국이 격리됐다. 전염병 방역 바늘구멍이 너무 커서 중동 낙타는 쉽게 통과했다.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곳에 낙타가 머물까 봐 걱정된다. 이참에 방역 체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국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6월 19일 오후 프레스센터 12층 회의실에서 퇴직언론인 실태조사 자문회의를 겸한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퇴직언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대한언론인회 회원을 비롯한 퇴직언론인 유효 표본 1,000명을 목표로 퇴직 이후의 커리어, 노후대책,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 기여방안, 퇴직언론인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착수한 것으로 사업 수행은 글로벌 리서치가 맡았다.

퇴직언론인 실태조사 순조

자문회의겸 1차실무회의 열어
유효표본 1000명범위등 확정

이날 1차 회의에는 우선 설문조사 대상 범위를 '10년 이상의 언론사 경력을 거쳐 현재 다른 직종에 고용되어 있거나 비 고용상태에 있는 퇴직언론인으로 하고 신문사(종

합일간지 11, 지역일간지 43, 경제지 10) 방송사(지상파 3, 지역방송사 46, 라디오 종편 보도전문채널 9) 뉴스통신사(연합뉴스)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금년 10월 말 까지 설

문조사결과를 분석,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수정 팀장, 이상기 차장, 강원대학교 김세은 교수, 글로벌 리서치 강수영부장, 김현희 대리, 대한언론인회 정운종 상임이사, 이상호 이사,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대한언론인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된다.

‘새민연’은 英노동당 ‘변신’을 배워라

각 분야의 노동조합이 결성한 영국의 노동당은 올해로 창당한지 115주년을 맞는다.

노동당은 창당 이래 지금까지 6차례 단독 집권했고 세계 제2차 대전 기간(1939~1945년)에는 보수당과의 거국(擧國)-연립정부에 참여했다.

제2차대전 중의 보수당과 연립정부때는 윈스턴 처칠 총리하의 보수당은 주로 외교 국방(전쟁)과 경제를, 노동당은 사회와 노동 등 일반적인 내정(內政)을 맡았다.

1942년 12월 노동당 당수이자 부총리인 클레멘스 애틀리는 전시내각의 노동차관으로 경제학자인 윌리엄 베버리지에게 의뢰해 전후(戰後)에 펼칠 민생안정과 복지정책의 청사진(靑寫眞)인 이른바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를 작성케 한다.

보고서의 요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가로막는 5대악(惡)으로 가난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꼽았다. 정부는 국민을 5대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완전고용의 추진과 가족수당, 연금확대, 무상(無償) 의료 서비스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복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이 보고서에서 나온 말이다.

노동당의 세 번째 집권은 이탈리아와 독일의 항복 직후인 1945년 7월 26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공약으로 채택, 국민을 열광시켜 승리함에 따라 실현됐다.

하지만 노동당은 무상복지의 재원 확보로 속을 태웠다. 한국전쟁 파병(派兵)후에는 전비(戰費) 마련을 위해 진료비와 노인들 의치(義齒)등을 수혜자 부담으로 바꿔 반발을 샀다.

노동당의 큰 고민은 또 하나 있었다. 즉 ‘생산 분배 교환수단의 공동소유를 옹호한다’는 당헌 제4조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의 국유화 문제였다. 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해 국유화를 단행 유지해야 한다는게 노조의 주장이었다.

국유화 요구와 마구 퍼주기식 복지, 산타클로스식의 복지 실시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극심한 불황과 경기침체를 몰고 왔다.

노동당은 정권을 빼앗긴지 13년만인 1964~1970년과 1974~1979년 두 차례 집권하는 동안 해럴드 윌슨과 제임스 캘러헌 내각이 복지정책의 개혁과 당헌4조의 수정을 시도했으나 당내 강경파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 재정적자의 급증, 심각한 불황, 격렬한 노동쟁의 속에 1979년 총선을 통해 정권은 보수당으로 넘어갔고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 내각이 18년간 지속됐다.

기진맥진한 노동당은 1995년 에딘버러 대학출신 44세의 토니 블레어를 당수로 내세운다. 블레어 당수는 3대 개혁만이 노동당이 살길이라고 역설했다.

첫째는 당의 대대적인 인적(人的) 쇄신. 당직과 의원직에 안주하며 정쟁(政爭)에만 몰두하는 인사들을 대폭 교체

太平路에서



이성춘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이사 논설위원

지난 5년간 6차례 혁신위 운영 개혁안 量産 휴지화

7차 개혁위도 소리만 요란

人的 물갈이 제도개선-정책수정 빠른결단 내려야

하고 나이 선수(選數)에 관계없이 활동과 실적 위주로 기용하는 것.

둘째는 당헌의 ‘국유화 조항’을 국익에 필요하고 국민이 동의할 경우로 단행 요건을 강화한 것. 셋째는 복지정책의 대수술이다.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고 대상자와 제공범위를 축소하며 수혜자도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다.

블레어당수는 2년간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와 노조를 설득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3대 개혁안의 참뜻을 널리 알렸다. 블레어의 개혁 노력으로 1997년 5월 총선거에서 압승해 노동당은 18년만에 정권을 담당한다.

블레어는 10년동안 과감한 개혁의 실천으로 2차대전 이래 영국 경제를 최고의 호황으로 일으켜 세우고 고든 브라운에게 정부를 넘겼으나 3년 후 경기침체로 총선에서 보수당에 패배했다.

지난 5월7일 실시된 영국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예상을 깨고 거뜬하게 승리, 계속 집권했다. 보수당은 5년전 집권 직후부터 국민이 싫어하는 인기 없는 정책에 과감히 손을 댔다.

데이비드 캐멜론총리는 방만한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적자의 급증을 막지 못하는 한 경제회생(回生)과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연금수령 연령의 상향조정, 실업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의 축소, 국민보험의 대수술, 공무원의 대대적 감축을 선언

오늘의 미래로

이홍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석좌교수)



했다.

복지의 다이어트와 허리띠 조르기에 나선 것. 3년만에 영국의 재정적자는 크게 줄었고 경제도 살아나 유럽에서 가장 높은 2.8%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민연’)은 4·29재보선에서 전패(全敗)한 후 문재인 대표의 인책론을 둘러싸고 한 달 이상 친노(親盧) 비노(非盧) 세력 간에 흠뻑물 싸움을 벌였다.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4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채 여지없이 완패한 것. 특히 새민연의 연고지인 광주-호남에서 패배한 것은 충격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문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미지근하게 사과했지만 비노측은 “완패는 당 운영의 무능을 드러낸 것만큼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친노측은 “총선거가 아닌 재보선인데 사퇴요구는 공연한 트집”이라고 일축했다.

문대표는 선거패배 25일 만에 당의 모든 문제점을 정비 개혁 하게 될 혁신위원회를 구성키로하고 위원장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임명했다.

위원장외에 당내 당외 각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에 대해 친노측은

“계파를 떠나 공정하게 인선됐다”, 비노측은 “친노측의 전위부대 같다”고 엇갈린 평가를 함으로써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그런데 새민연의 혁신위 운영 상황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2010~2015년까지 5년간 혁신위를 무려 6차례나 구성 가동했고 현재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실천위가 버젓이 존속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구성하는것은 옥상옥(屋上屋) 격이 아닌가.

아무리 기막힐 정도로 훌륭한 개혁안을 수백개 수천개를 양산(量産)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실천하지 않은 개혁안은 곧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도대체 지난 5년간 작성한 개혁안들 중에서 실행된 것은 과연 1~3%나 될까.

문대표는 “혁신위에 전권(全權)을 부여 하겠으며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위가 결정한 개혁안을 관철(실천)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많이 들어본 얘기다. 역대 대표들도 혁신위 출범때 마다 비장한 각오로(?) 거의 같은 다짐을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 되고 만 것 아닌가.

혁신위는 텃밭인 광주에서 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제1차로 혁신안을 발표했다.

1차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보선의 원인제공을 한 지역에 대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부정부패 연루자는 기소 재판에 회부될 경우 당직박탈, 당내 불법선거 당비대납에 대한 처벌강화, 지역 당협위원장의 기득권 제한, 선출직 공직자의 심사와 관련해 외부인사가 3분의2 참여하는 평가위 구성 등이다.

1차 혁신안이 나오자 당내에서 비판과 혹평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의 안이 앞의 혁신위에서 심의 작성됐던 것이고 일부는 새누리당이 이미 시행한 것이라며 도대체 이번 혁신위는 배기 기위, 표절위, 아마추어위, 소리만 요란한 강동위원회냐는 지적들 이었다.

혁신안은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중앙위원회에서 의결, 확정된다. 최고위 등에서 계파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혁신안이 왜곡 변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한다. 새민연은 내년 제20대 총선거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 집권을 위해 마음을 비우고 공정한 당 운영과 필사의 각오로 준비할 것인지, 적당한 당 정리에다 친노측이 당권과 공천권 장악에만 몰두, 당의 내분과 최악의 경우 호남 분당(分黨)으로 총선도 집권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정치의 생명은 약속의 실천이다. 만의 하나 혁신위가 선거패배의 인책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간벌기 용(用)이라는 인식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날 토니 블레어가 당원들을 설득해서 노동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대적인 인적물갈이, 과격적인 당의 쇄신과 새 정책으로 18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문]

애국하는 마음으로 法을 지키자

법은 한 마디로 ‘필요악’이다. 없어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꼭 있어야한다는 이율배반의 논리적 모순을 동시에 안고 있다.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만 이 세상에 산다면 법은 필요치 않다. 하지만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기화하고 범죄가 격증하는 현실에서 법이 없다면 어찌 되겠는가. 아마도 주체할 수조차 없는 ‘카오스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이 필요한 이유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오늘 같은 자동차충수시대에 만일 도로교통법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온 나라가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불편해질 것이고 하루 속히 법을 만들어 달라는 아우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법이란 만민에게는 이롭고 소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 국민의 법의식수준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법질서의식은 건국 후 개발도상국 시절에 비하면 괄목할만하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미 선진국들의 법 준수 수준에 비교하면 아직도 먼 거리에 머물고 있다. 요즘도 우리 국민들에게서 흔히 눈에 띄는 폐단은 정해진 규칙과 법질서를 따르기보다 ‘편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이다. 편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탈법과 비리를 부르게 된다는 점에서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편법은 마치 탄탄대로를 놔두고 오불꼬불한 샅길을 이용하는 형국과도 비유된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를 리드하는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반드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동기는 된다. 하지만 다민족이 모여서 만든 미합중국이 지금 초강대국이 된 저변에는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확고한 준법정신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셋만 모이면 줄을 서고, 일단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면 여기는 사람이 드물다. 바쁘다고 우리처럼 차들이 뺄뺄 달리고 있는 대로를 무단 횡단하는 일이란 볼 수가 없다. 우리도 그런 문화시민의식을 본 받아야 한다.

법 만능주의도 문제다

우리는 인구와 작은 국토에 비해 법이 너무 많은 편이다. 그래도 부족해서 해마

제헌절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6·25참전 언론인회 부회장

규칙·법질서보다 ‘편법’ 의존 경향심해

안 지켜지거나 악용소지 法도 많아

고위층 솔선수범 ‘上濁下不淨’ 끊어야

다 온갖 명목의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 고조 시절에는 단지 ‘법 3장’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전한다. 곧 살인자는 사형, 사람을 해치는 자와 남의 재산을 약탈하는 자는 구속해서 정도에 따라 형량을 매기는 세 가지 법률뿐이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방을 붙여서 계도했는데 순한 백성들이라 잘 따라주었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태고적 얘기고 지금 같은 기계문명시대에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세계인구는 이미 73억명이 넘었고, 대한민국 한 나라만 해도 5천만명을 넘는 상황이다. 이 많은 인구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으니 법도 해마다 양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무수한 법 가운데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옥상 옥’의 법률들도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복잡한 법망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돈 없고 배경없는 무기력한 사람들만 꼬박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불공평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유전무죄’이라는 비아냥도 생겨난 것이다.

헌법은 ‘법중의 법’

7월17일은 제헌절이다. 1948년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67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임을 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도 그 해부터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영토의 범위, 통치기관의 조직 및 기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은 나라의 기본법이다. 그런 관점에서 흔히 ‘법중의 법’으로 일컬어진다. 헌법정신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헌법을 가진 나라도 만일 국민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도층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헌법은 사문화나 다름이 없다. 무엇보다도 ‘윗물이 흐르면 아랫물도 흐리다’는 속담이 뜻하듯 국가 고위층부터 매사에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뇌물사건에 연루되고, 군 고위 장성이 방산비리의 장본인이 되는 나라에서는 만년이 가도 ‘상탁하부정’ 악순환 고리는 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이제부터라도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국법질서를 잘 지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메르스까지 파는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요즘 시간이 많아 TV를 많이 본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행위를 보면서 그에 대한 생각도 한다. 그 생각들을 모아 봤다.

선무당의 허튼 소리가 될지도 모른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다.

얼마 전 친구 사무실에서 있었던 얘기를 쓴 풍자시 소개부터 한다.

〈평소에 말이 없는 친구가 고스톱 치다가/ TV에서 “국민의 뜻” 어쩌구 하는 정치인의 말 듣더니/ “야 제발 국민 그만 팔아라”라며 화를 낸다.

그리곤 냅다 똥 광을 치더니 그만 싸버린다. /얼굴이 불쾌해진 그가 내뱉는 말/“국민이란 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야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이란 말의 뜻은 자기 패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을 지칭한다. 그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란 얘기가 된다.

수십 년 전 사회부 기자로 경찰서를 드나들 때였다. 정치 담당 기자에게 정치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을 말했더니 그 기자가 말하기를 “정치란 보다 차원이 높고 고도로 계산된 전략과 정략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현란한 그의 말을 듣고 정치와는 애초에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고 열심히 경찰서와 병원 응급실을 돌아 다녔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다. 세상을 살고 좀 생각도 하면서 그 현란한 전략이란 게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기와 패거리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몇 해 전의 일이다. TV에서 여·야 정치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걸 보고 초

등학생이던 손자가 “할아버지 저 사람들 왜 저래요?”라고 물었다. 뭐라 답해야 하나? 그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난감해 진다.

4~5년 쯤 전의 일이다. 어느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선배 언론인이 “자유당 때부터 국회의원들 만나고 취재하고 했는데 요즘 국회의원들이 제일 형편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바꿔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라고 하는 말에 공감

했었다.

정치 불신은 신문에서도 쉽게 읽힌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지난 5월30일자 한 일간지가 1면 머리기사로 뽑은 ‘입법부 獨裁’란 제목이 시원해 보였다. 국회가 제 멋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월2일자 머리기사 제목인 ‘法만 들어 놓고 탄소리—코미디 國會’란 제목에도 고개가 끄덕여 졌다. 그리고 “제목 들 잘 뽑았네”라고 공감했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탄지간다고 불평하고 시비를 걸던 정치인을 떠올렸다. 막상 그가 하는 일이 탄지거는 것 같다고 생각돼서 였다. (국어사전에 탄지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나라를 뒤흔들고 많은 이의 생계도 어렵게 만든 메르스와 관련해서 누구도 잘했다고 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정치인도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할 것 같다.

정치인들은 메르스 까지 표를 얻는데 써먹으려고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이

7면으로 이어집니다.

‘제왕적 국회’ 국민이 심판할때다

올 해는 광복 70주년, 67회 제헌절을 맞는다. 아홉 번의 개헌을 거친 현행 헌법은 헌정사상 가장 긴 28년 동안 우리 헌정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다.

헌법은 나라의 최고 규범이고 정치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공감적인 가치질서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려는 규범이 헌법이다. 그렇지만 헌법은 정치규범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치세력에 의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가장 큰 규범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도 헌정사상 여러 번의 규범적인 훼손을 당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헌법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바탕을 둔 권력분립의 틀을 무시하는 여러 현상이다. 특히 근래에는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 행태가 심해지는 경향이어서 경계를 요한다.

위헌적 관행·법률 방치...불체포특권 남용

흔히 제왕적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오히려 제왕적 국회로 흐르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해의 예산안을 의결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국회가 지키는 일은 거의 없다. 늘 위헌적인 국회의 관행을 내세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방치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악용·남용하는 일이 일반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책임정치실현의 불가결한 메커니즘인 다수의 통치형태를 무력화하면서 소수의 지배를 관철하려는 입법을 서슴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反)대의제적인 법률이다. 대의정치의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법률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각 정당의 의석수로 표출된다고 할 때,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인 요구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실현될 수 없는 현상은 분명히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현상이다. 이 위헌적인 정치행태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 국회는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회자율권의 한계를 한참 벗어나는 국회운영형태이다. 헌법재판소마저도 주저하면서 결정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제4의 국가기관으로 설치된 이유가 바로 그런 헌법정신에 반하는 법률을 무효화해서 헌법의 규범력을 살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라는 것이다. 소수의 보호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가치이며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소수의 보호가 오히려 소수의 전횡으로 흐른다면 분명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소수의 발언권을 무시하는 다수의 독재도 지탄받아야 하지만 다수를 다수로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 오만은 다수를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의민주정치의 기초는 다수세력의 가변성이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 소수가 되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 다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이유는 다수가 반드시 옳기 때문이 아니다. 내일 다수관계가 바뀌었을 때 그런 복종의 관행이 그대로 지켜지리라는 기대와 신뢰 때문이다.

제헌절

특별기고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학

국회선진화법 ‘대의민주’ 헌법무시

다수 인정않는 소수의 오만

국회법 개정안도 전제·균형 어긋나

국회선진화법은 이런 대의민주정치의 기능적인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악법이다.

최근 위헌논란을 불러일으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도 제왕적 국회를 징표하는 또 하나의 예이다. 국회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법률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부가 정하도록 행정입법권을 부여했다. 이 헌법의 취지는 법률의 시행과 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부에 일정한 규율의 자율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률을 집행하고 시행할 때는 법률의 실효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수월성을 가진 행정부에 행정입법의 재량권을 준 것이다.

자유민주시민 투철한 자각·책임감 필요

물론 행정입법은 어디까지나 모범인 법률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범인 법률에 어긋나거나 모범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행정입법은 모범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입법권이 이런 모범종속적인 한계를 지킴으로써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헌법은 마련하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심사권과 함께 국회에도 통제권을 준 것이다. 이것은 권력의 악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려는 권력분립정신의 구체적인 제도적 표현이다.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국회의 통제권이 행정입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면 과잉통제로서 견제·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 개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회법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이 바로 그런 과잉통제에 해당한다. 국회가 구체적인 수정·변경내용을 정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처리해서 보고하도록 명령한 취지라면 행정입법의 주체인 행정부로부터 행정입법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행정입법권의 주체인 행정부가 국회의 명령집행자로 전락하는 꼴이다. 국회제정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와 행정입법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심사는 모든 국가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과잉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최상의 길이기 때문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이러한 견제·균형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된다.

제왕적 대통령도, 제왕적 국회도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에 어긋나는 일이다. 헌법이 헌법으로서 규범적인 효력을 나타내게 하려면 주권자인 국민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국민이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투철한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이 가진 투입(input)기능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당장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정치혁신은 국민이 나서야 가능하다. 국회에 활발한 신진대사를 성사시켜 관행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갖가지 반헌법적인 정치행태를 척결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똑바로 주인노릇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도 제왕적 국회도 발붙일 수 없다. 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정치는 꽃필 수 없다. 제헌절을 맞아 모든 국민이 다시 한 번 헌법수호의지를 다짐할 때이다. [국회]

6면에서 이어집니다.

드러나 미워보였다. 전염병의 대응은 과잉이어도 좋다는 말도 못 마땅했다. 지혜롭지 못한 과장(誇張)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얼마나 키웠는가?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다. 어떤 누구도 정보를 횡령할 수 없다”고 외치며 2003년 중국 베이징 시의 사스 창궐을 막았다는 왕치산 시장을 소개한 한 신문의 칼럼이 돋보였다. 모든 문제의 답은 사실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줄여도 문제가 되고 늘려도 문제가 된다. 거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끼여 있다면 그건 최악이 아닌가?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란 생각을 하게 한다.

유대사회에서 탈무드를 정리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제외시킨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 하기 때문이란다.

언론은 그저 많이 보도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결과 자다가도 메르스 꿈을 꾸는 이도 있었는데 뭘 그렇게 시시콜콜히 많이 알려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겁을 잔뜩 주면서.

언론도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는 관객은 특정 선수의 실수를 비난하고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경기장에 뛰어들어 경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직접 경기를 하겠다고 설치는 것 같은

정치인의 모습을 볼 때는 짜증이 난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핑계를 만들든 정치인은 달라져야하고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정신 나간 국회, 응급실로 보내야 합니다.!!!〉라는 신문광고가 눈길을 끌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던가? 정치인을 비난하는 세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종종 택시를 탄다. 그러면 기사와 이야기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 요즘은 정치 비난의 목소리가 세졌음을 느낀다. 많이 달라진 반응이다.

고스톱을 치던 친구들이 저녁에 막걸

리 한잔하며 세태를 논하다가 한 친구가 무서운 질문을 던졌다.

“국회의원 가운데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는 것이 김정은이 쳐들어오는 일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하는 데 그 방법이 없다고 탄식하던 선배 언론인의 말이 다시 생각난다. 잘못하면 혼나고 꾸중도 들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거칠게 없어 보인다. 돈 받아먹는 사실이 확인됐어도 임기까지 국회의원 해먹는 일은 뭐라해도 말이 안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했는데 장대비를 맞아도 끄떡없으니 말이다. 정치 불신이 극에 이른 것 같다. 정신 차려야 할 때다. 말로만 말고 말이다. [국회]

새로운 시각으로 해부한 ‘6·25전쟁과 미국’

북한의 기습 남침을 받아 존망의 기로에 몰린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존하게 되는 과정을 심층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서가 광복 70주년, 6·25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출간되었다.

분회 회우 남시욱(전 문화일보 사장·현 세종대 석좌교수)씨가 쓴 이 책은 아울러 유엔군이 왜 북진통일에 실패했는지도 당시 미국의 세 주역인 트루먼 대통령, 애치슨 국무장관 및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사이의 협력과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통해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한국은 냉전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이다”라고 결론지은 저자는 이 책에서 피아간 전투원만 300만 명의 인명손실을 낸 6·25전쟁을 트루먼 행정부가 왜 사전에 억제하지 못했으며, 미리 예고된 중국의 전쟁개입 역시 왜 차단하지 못했는지도 해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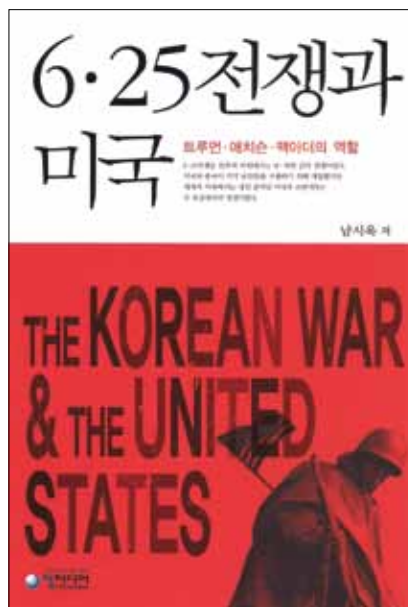
남교수는 6·25전쟁이 20세기 인류 문명사의 일대 사건인 동서냉전이 빚은 특이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쟁은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는 순간부터 무력통일을 꿈꾼 북한 김일성의 계획과 발의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에 소련의 스탈린이 편승해 그의 세계적 냉전전략에 이용함으로써 스탈린과 김일성의 합작품이 되었다. 6·25전쟁은 스탈린이 전쟁 준비와 개시 단계에서부터 휴전협상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전략 전술을 지시한 점에서 ‘스탈린의 전쟁’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남교수에 의하면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신속하게 한국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한국 자체의 군사적 가치보다는 미·소 냉전에서 스탈린에게 밀려 미국의 신뢰와 위신이 손상당하고 스탈린으로 하여금 또 다른 야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6·25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중국 대륙이 적화되자 트루먼 정권이 아시아정책의 실패로 중국을 상실했다는 공화당 등 보수세력의 거센 공세에 직면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국내적 요인도 파병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남교수는 이 같은 6·25전쟁의 발발 배경과 미국의 참전과정에 주목해 이 전쟁을 스탈린이 지도한 공산진영의 국제공산주의혁명 운동 대 반공주의자인 트루먼이 이끈 서방진영간의 이념적 ‘십자군전쟁’의 성격을 지녔다고 결론지으면서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전설을 배격했다.

6·25전쟁을 억제하지 못한 원인은

남시욱 회우 심층분석 저서 출간



한반도 집단안보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남시욱 회우. (동아일보 제공)

트루먼-애치슨-맥아더 갈등 조명 中共軍개입 차단못한 이유등 밝혀

1차적으로는 준비도 없이 북진통일을 외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있지만 그 실제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한 트루먼 행정부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신생 대한민국이 제대로 일어서기도 전에 8·15해방 때 진주한 미군을 서둘러 철수시켰다. 미 국무부는 동서냉전의 최전선인 한국의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해 조기철군을 반대했으나 트루먼행정부의 국방예산 삭감과 병력감축 방침이라는 국내적 요인 때문에 철군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철군방침이 확정된 다음에도 그 일정이 세 차례나 변경되는 등 정책의 표류를 겪었다.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방어선에 제외함으로써 김일성의 남침 시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스탈린에게 주었다 해서 논란거리가 된 1950년 1월 애치슨의 프레스클럽 발언은 소련과 중국의 이간, 즉 마오쩌둥을 티토화하려는 목적의 연설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관해서는 신중치 못하고 애매한 발언이었다. 트루먼 행정부가 중국의 6·25전쟁 개입

을 막지 못한 것은 커다란 외교적 실패였다.

6·25전쟁은 미국 국내에서는 트루먼 행정부와 맥아더의 대결이기도 했다. “전쟁에는 승리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굳게 믿은 맥아더는 신속한 전쟁수행을 위한 위싱턴당국의 과도한 간섭에 대한 반발을 보이면서 만주폭격, 중국대륙봉쇄, 본국으로부터의 병력증강을 주장했다.

그는 결국 트루먼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해임되었다. 맥아더의 패배는 그의 아시아 중시주의에 대한 트루먼과 애치슨의 유럽 중시주의의 승리이며 군부실력자에 대한 문민통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트루먼 애치슨 맥아더 3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트루먼 행정부의 전쟁 수행과정을 분석하는 방식, 즉 이른바 ‘행위자 특정 접근법’(Actor - Specific Approach)을 원용해 6·25전쟁을 분석했다.

이런 분석 방식은 현대외교의 한 특징이라 할 정상외교의 예에서 우리가 자주 본다. 이 같은 접근법은

국제정치가 궁극적으로 외교라는 체스게임을 하는 개별적 인간 행위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경험적 사실과 부합하는 현실적 분석 방법이다. 저자는 이런 시각에서 세 주역들의 협력 및 성취와 함께 유엔군 북진작전 이후 생긴 그들의 갈등관계-특히 그들의 세계관과 국제정세판단의 차이-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 달성을 실패하게 만든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유엔군의 38선 돌파 북진작전으로 한국의 통일을 이룩하려 했던 트루먼 행정부는 맥아더의 크리스마스 공세 패배에 심리적 충격을 받아 통일 목표를 사실상 폐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천상륙작전의 빛나는 승리로 수십만 명의 인명 손실을 막은 맥아더였지만 그의 크리스마스 공세 실패는 산악지대에 30만 명 이상의 중공군이 숨어있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그의 정보실패에 최대의 원인이 있었다.

나중에 애치슨과 미국 군부는 중국에게 개입의 구실을 주지 않고 또한 방어하기도 가장 쉬운, 한반도의 목 또는 허리로 불리는 평양-원산 지역에서 유엔군이 진격을 멈추지 못한 점이 트루먼행정부의 결정적 실책임을 자인했다. 만약 유엔군이 평양-원산 선에서 진격을 멈추었다 라면 중공군이 전투에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록 그 때 유엔군이 완전한 통일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할권을 미치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세력판도가 완전히 달라져 그 후 한국주도의 통일에도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25전쟁은 미·소, 그리고 미·중 간에는 동서냉전 과정의 제한전쟁이었으나 남·북한 간에는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건 총력전이어서 한민족의 피해가 막심했다. 6·25전쟁은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값비싼 교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6·25전쟁은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유엔의 집단안보체제가 실험된 최초의 예이다. 한반도에서의 집단안보문제는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남교수는 끝맺고 있다.

저자는 이 방대한 6·25전쟁의 실체를 파악하기위해 미국 워싱턴DC 근교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소재 트루먼도서관, 버지니아주 노퍼크의 맥아더기념관 등을 방문, 관련 기록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다. [4]

秘話

7·27휴전, 그리고 이승만 박사

6·25 전쟁, 그로부터 65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맺은지도 62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6·25전쟁은 지금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정전 상태나 다름없다. 북한은 7월 27일 휴전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이라며 이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이는 그들의 광신적 잔치일 뿐이다.

흔히 6·25는 김일성이 일으키고 마무리는 미국이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판문점 휴전회담이 있기까지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휴전협정 전후 종군기자로 활약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정전협정 당시의 취재수첩을 다시 꺼내 회고해 본다.

돌이켜보면 정전협상이 무르익던 당시의 전환은 유엔군 측이 우세하였고 이런 기세 속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승만대통령이 줄기차게 정전회담을 반대했던 속셈에는 벌써 이때 한미방위조약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1951년 5월 20일까지 중공의 공세는 약화되고 전세는 국제연합군에 유리한 국면이었다. 이처럼 적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6월 23일 국제연합 소련대표 J. Malik는 상호 38선에서의 철수를 조건으로 정전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지도 자들의 입장도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자국 군인을 한명이라도 덜 희생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이런 제의는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연락장교의 회답이 있었고, 그 이틀 뒤인 7월 10일 개성 공산군지역인 ‘래봉장’이라는 한옥 집에서 국제연합군의 대표와 북한 및 중공의 대표가 첫 회담을 갖기에 이른다. 양측 모두 자동차에 흰 깃발을 달고 회담장 까지 가게 돼 있었고 유엔군 측 역시 흰 깃발을 달고 상당한 거리의 적진을 달려 래봉장에 도착한다.

전투경계선은 판문점인데 굳이 개성에서 갖자는 공산 측의 저의도 의 심스러웠지만 북한이 유엔 측에 흰 깃발을 달고 오도록 한 것은 뒤에 알고 보니 항복 깃발로 오인케 하려는 술수였다. 북한이 7·27 휴전 일을 전승기념일로 보는 배경에는 이런 억지도 한몫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있기까지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거센 반대가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회담장소 비무장화문제도 개성에서의 회담이 결렬되고 1951년 10월 25일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회담을 재개했다. 국제연합 측에서 미 해군 중

장 C. T. Joy제독, 미 공군 소장 L. C. Burke, 한국군 소장 백선엽 장군이 참석하였다. 개성 회담 때는 연희전문학교 언더우드 박사의 아들 3형제가 유엔대표의 통역을 맡았으며 한국측의 이수영 대령도 통역관으로 활약했다.



지갑종

·본회 원로회우
·유엔한국참전국협회 회장

일각에선 이승만 박사 납치소문까지 나돌았다. 반공포로 석방 후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부산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하고 ‘휴전회담’을 설명하였는데 이 대통령은 이때 갑자기 클라크 장군의 어깨에 단 별 넷을 움켜

의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각서가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미국 무차관 월터 로버트슨이 특사로 내한했다.

결국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북한군과 중공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他方으로 하는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서명되고 이날 밤 10시 일단 총성은 멎었다. 이로써 1951년 7월10일 부터 시작된 정전회담은 2년 17일 동안 총 575회의 공식회담 끝에 마무리 되었다. 결국 전쟁기간의 3분의 2는 회담하며 싸운 셈이다. 당시 휴전회담 현장을 취재했던 김진섭 박성환 방낙영 이지웅 이혜복 임학수 최기덕 최원각 한영섭 함태암 기자의 얼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휴전회담 진행 중 로버트슨 미국 무차관이 이승만 박사에게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휴전회담을 조기 성사 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였겠지만 이 박사는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즉석에서 한미 간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 1953년 10월 1일 공식 서명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덕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보병 10개 사단 분의 군원과 전후복구원조를 확보하였다. 6·25전쟁 후속조치로 1954년 4월 2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선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19개국)국가의 대표가 참가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협의하였으나 동서 양진영의 의견차이로 그해 6월 25일 결국 결렬되고 만다.

이승만대통령은 또 정전 직후인 1953년 11월 27일 대만으로 장개석 총통을 방문하고 ‘아시아 민족의 반공전선 결성’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 따라 1954년 6월 15일 제1차 아시아 반공연맹 총회가 한국 진해에서 발족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투철한 반공정신을 대변해 준다. 여담이지만 6·25전쟁으로 지친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복구를 호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1954년 7월 27일 백악관에서 아이젠하워대통령과 회동했다.

도미하기 전 이 대통령은 수 개월 째 이발을 하지 않아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다. 이 대통령이 김포 비행장을 출발할 때 기자인 필자는 “이발을 하시고 가실 것을...” 하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낮추어 “도움을 청하려 갈 때는 이 모양으로 가는거야”라고 말씀하셨으며 방미 목표를 달성하고 귀국할 때는 말끔히 이발을 한 모습이었던 것이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뇌리에 생생하다. [4]



첫 휴전 회담이 열린 개성의 ‘래봉장’.

이승만 대통령 ‘한미상호 방위조약’ 생각 “북진통일” 주장등으로 휴전회담에 제동



판문점 휴전회담 당시 첫 유엔군 수석 대표였던 윌리엄 K 해리스 예비역 육군중장(왼쪽)이 1990년 방한해 필자(오른쪽)와 면담.

1953년 6월 8일 공산 측과 유엔 측은 포로교환 일정표에 합의하고 6월 18일 최종 서명하기로 했지만 이승만대통령은 6월 18일 새벽 전격적으로 반공포로 27,000명을 석방하기로 이른다. 유엔은 발각 뒤집히고

잡고 “정전회담은 정치야!” 전쟁은 군인이 하고 정치인만 하는 것이니 정전회담도 정치인만큼 이별 떼고 와서 정치적 이야기를 나누자”고 호통 쳐 보냈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급기야 7월 11일 미국에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재난방송’ 인가 ‘방송재난’ 인가

2015년 6월은 대한민국 방역사상 수치의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뉴스를 접할 때, 가까운 홍콩이나 동남아가 신종 질병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그래도 보건과 의료 선진국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곤 했다. 6·25 이후 그 처참하고 더러웠던 상황, 디디티 가루를 뒤집어쓰던 방역, 개학하면 아이들 몇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던 슬픈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로서는 짧은 시간에 이룩한 모국의 청정화가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중동에서 발병했다는 메르스가 그 모든 자부심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지리멸렬함. '낙타 고기나 젓을 먹지 말라'는 코미디적인 대처 방안. 컨트롤 타워와 매뉴얼의 부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 정부를 믿지 못하니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절망감, 이런 행태들이 시시각각 외신을 타고 보도되면서 한국은 여행 주의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면 언론, 특히 방송은 제대로 대처했는가? 냄비 저널리즘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끓어올랐다. 국가 재난주관방송인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와 보도전문채널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은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사실을 리포트 한 두 건으로 대수롭지 않게 다루었으나 5월 28일 확진자가 7명으로 늘어나자 메르스 관련 뉴스를 톱으로 올려 한 달 너머 매일 주요뉴스로 전체 뉴스의 절반 가량을 메르스 관련 뉴스로 도배했다.

방운현 동서대 교수가 방송기자저널 195호에 기고한 분석에 따르면 방송 3사의 메인뉴스에서 메르스 관련 보도가 차지한 비율은 5월 28일 13.7%로 시작해 23.4%(5월 29일), 29.3%(5월 30일)로 늘어가다가 격리대상자가 1,300명에 이른 6월 3일에 51.9%, 평택성모병원 방문자를 전수 조사한 6월 5일에는 68.4%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언론 5단체가 스스로 만든 ‘재난보도준칙’과 보건복지부 기자단이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3년 전에 제정된 ‘감염병 보도준칙’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재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고, 신종 감염병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측, 과장, 확대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의 단어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도



유자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메르스사태 ‘재난보도 준칙’ 무시
‘공포’ ‘대란’ 부추겨 국민불안 가중

있다.

아무리 좋은 지침이 마련돼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종편들은 맹활약했다. 그들은 거의 전 시사 토크 시간을 메르스 사태로 채웠다. 종편의 시사 토크를 보고 있으면 떨쩔하던 사람에게는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채널을 돌려봐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해댄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회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목소리가 높고, 흥분돼 있다. 그들은 마치 흥분할수록 더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6월 3일, TV조선은 “메르스, 대란 넘어 ‘메르스 포비아’ 이제 메르스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자고나면 환자가 늘어나고 3차 감염자도 늘고 있습니다”라며 ‘공포’와 ‘대란’을 오히려 부추겼다. 이런 보도 행태는 자칫 선동으로 흐르기 쉽다.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이 결국 정부의 우왕좌왕 행태와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다. 언론도 정부와 함께 춤춘 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공포 보도가 경쟁적으로 펼쳐지다 보니 차별한 정보 제공 보다는 치사율이 40%라는 과장 보도가 강조돼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방송사마다 의학전문기자가 있으나 전문성이 돋보이는 현장 취재는 없었다. 특히 종편들의 메르스 보도는 ‘재난 극복 프레임’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치중해 이슈화하는 데에 몰두했다. 마침내 나라 전체가 공포감으로 얼어붙고, 대

통령은 예정됐던 미국 방문마저 일방적으로 연기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일련의 사태에 종편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마침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편들의 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줄이라는 권고까지 하게 된 우리들의 무분별한 이런 종편들을 어찌해야 할까?

메르스 사태는 슬픈 기시감을 가져온다. 1년 전 세월호의 비극이 오버랩되는 것이다. 그런 국가적 재난을 겪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혁까지 했는데도 사고를 당하자 여전히 찢찢 때는 상황을 연출하고 만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정부의 질병관리본부의 초라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첫 환자 발생 후 며칠간은

의사 출신인 질병관리본부장 주도로 방역 작업이 진행됐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23일 이후에는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들을 이해시키고,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마치 알베르 카

뮈의 소설 〈페스트〉의 상황을 연상케 하던 메르스 사태는 WHO(국제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이 방한해 큰 걱정말라며 안심시켜준 뒤에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종편들의 물량 폭탄적 보도에 국가 기간방송 KBS는 보이지 않았다. 중심을 잡고 사건 발생과 분석, 대책과 해법을 차분하게 짚어가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KBS의 존재감은 너무나 미력했다. 뉴스 보도와 정부의 메르스 예방과 대처 홍보를 알리는 스팟이 고작이었던 KBS의 메르스 보도는 상황이 심각해져서야 정규 프로그램을 메르스 특집 식으로 편성하는데 그쳤다. 그 기간 동안에 정보에 목마른 시청자들은 종편의 몰아치기 토크들을 찾아가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리다간 KBS의 정체성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을까?

메르스 사태에서 방송이 확실하게 기여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개인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 것이다.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기침이나 재채기는 팔꿈치로 입과 코를 가리며 하고 감기가 나돌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것은 확실히 방송의 공로다.

메르스 관련 보도는 국가 재난 사태에서 방송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여기에 대한 방송사 자체의 반성과 관련 단체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아직도 ‘지

법무부장관 후보내

청와대가 공식 중인 법무부장관 후보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 발표했다.

이에 대한 주요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언론은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있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정부 17개 부처의 장관 중 한 사람을 내정 발표한 것에 불과한데 그 반응이 천편일률적이면서 자못 비장하다.

‘호남민심 배려 차원’ ‘박 대통령의 탕평책’ ‘지역 안배’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호남인사 발탁’ 등.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가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느 부처의 수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당사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식견, 인품을 위주로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그 결과를 지역안배와 민심다독이기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시각이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5천만 국민 가운데 말을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도 그가 실제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어떨지 마음 졸일 상황인데 고작 선택의 기준이 17분의 1을 2로 만들어 이반된 민심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하는 우리 언론의 수준을 어디에 비견할 것인가.

인선을 발표한 청와대 또는 박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보자. 공식 중인 법무부 장관에 호남 출신을 임명한 것은 전라남북도에서 사는 국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호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서였는가.

아니면 호남에 사는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번에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공부한 김 아무개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으니, 그래서 17개 장관 중 호남사람이 두 사람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니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하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이 눈 녹듯이 일거에 사라졌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현상이다. 감히 백척간두라고 할 만한 상황이다. 국가안보가 그렇고, 무역수지가 그렇고, 민생경제가 그렇고, 대기근이 그렇고, 번지고 있는 역병이 그렇다. 5천만 국민이 온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이다. 국난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는 데 17개 부처장관이 모두 영남이든 호남출신이면 어떻고, 하나같이 어느 군소세력 출신이면

‘재외동포저널’

‘재외동포 저널’이 7월 중 창간을 앞두고 작업 중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를 맞아 730만 재외동포들의 여론을 담는 그릇으로, 국내의 사정을 동포들에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다짐하며 7월중 창간하게 될 ‘재외동포 저널’은 국내외 동포는 물론 유관기관들에게 배포돼, 조국 발전



최병호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적 타점'인가

정 언론보도를 보고



요
원
신문

어떠하며 모두 어느 고등학교 졸업생이면 어떠한 말인가. 5천만 중에서 가리고 가려 뽑은 최적인물이면 그만 아닌가.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떤 직종 출신을 따지는 것은 사회학자나 통계학자들이 하는 일이다. 언론이 기껏 한다는 게 장관 한사람으로 탕평책이 되는 양 보도하고 해설하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하다.

당신네 언론사와 매체에서는 부장급 인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대학 출신, 어느 성씨 출신을 안배해가며 편집국이나 보도국의 정서를 탕평하는가? 아직도 말이다. 정치부 데스크에 최고의 책임자를 발령해 타사와 경쟁하지 않는가 말이다.

1980년대에는 그랬다. 군부세력들이 온갖 요직을 독점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느라 지역안배, 인사탕평, 민심수습 따위의 강제보도를 일삼았었다. 그때 누가 한사람 고위직에 임명되면 언론매체들이 하나같이 ‘청렴강직, 공선후사, 외유내강, 두주불사’를 키워드로 프로필을 써댔다.

그뿐인가. 대기업그룹 인사철이 되면 어느 그룹의 이사 승진은 영남출신이 몇%인 몇 명, 호남출신이 몇 %인 몇 명이니 어쨌느니 하며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았는가. 그 바람에 삼성 그룹은 호남사람을 중용하지 않으니 입사지원하지 말라는 유언비어 때문에 호남지역 출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제한받아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가 말이다.

우리의 언론이여! 아직도 암울했던 그 시대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가. 안타깝다. 이제 깨어나라. 이번에 김현웅을 공석중인 법무부 장관에 발탁한 것은 이 시대가 그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당위성기사를 썼으면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청문회에 앞서 그의 부적격성을 신랄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언론이고,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은 1945년 해방을 맞아 첫 마디로 “이제 우리는 고향을 묻지 맙시다.”라고 절규했다. 지역주의가 이 겨레의 앞길에 큰 암초가 될 것을 예견한 절규였다. 70년 후, 지금의 언론 후배들의 일그러진 행태를 미리 보았음도 틀림없다. 月南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7월중 창간기로

과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상담역(전 춘천MBC 사장)이 회장 겸 발행인을 맡고 편집고문에 이성춘(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본회 논설위원, 사장 겸 편집인에 안병준(전 내일신문 편집국장)회후가 수고 한다.

한일수교 50년 기획보도 눈길

신문시평



박석홍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 전 언론법학회 감사

국제 학술회의-여론조사 등 실시 한일기본조약 체결 오류 등 지적

반자가 되려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먼저다”라고 대답했다. 아베정권은 사죄가 먼저라는 박 대통령의 대미 설득을 “아줌마 외교”라고 비아냥거리며 한국 경제를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아베총리의 역사 인식과 발언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관계를 혼란에 빠뜨려 미국의 국익에 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도 “성노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부당한 짓을 하지 않도록 국민을 교육하라”고 일본에 권고했다. 미국 언론과 정치인 역사학자들도 “아베 망언이 일본을 기억 상실에 빠진 반인륜 국가로 전락케 했다”고 비난했다.

6월 신문은 한일 국교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국제학술회의·여론조사·양국관계사 정리 작업 등을 배풀었다. 동아일보가 아사히신문과 공동조사한 여론조서에서 ‘일본이 좋다’고 답변한 한국인이 6%, ‘한국이 좋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10%며, 한국일보가 요미우리신문과 공동조사한 한국·일본 상호 신뢰조사도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는 한국인이 84.9%,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일본인이 73% 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일 새 정권이 ‘위안부’·독도문제로 격돌한지 2년 반이 지났으나 매듭짓지 못한 채 매년 500만 명이 교류하고 900억 달러를 교역하는 두 나라 국민의 상호 불신만 깊어진 것이다. 아베 총리의 군국화정책, 일본군 집단 성노예 범죄, 독도 분쟁화, 일

본군 한반도 상륙 우려 등이 갈등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사실은 역사 인식의 차이가 주범이다. 동아일보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기획시리즈 ‘한일, 새로운 이웃을 향해’를 통해 한일 고대 교류사를, 프리미엄 조선은 장대성 전 영동대 총장의 기고문으로 일제 침략사를 정리했다. 신석기 이후 일본 역사의 주체 세력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아베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외무장관도 1986년 일본외무성 초청으로 방일한 한국 기자에게 “아베 집안의 조상도 한반도에서 건너왔다”고 고백 했다. 국교정상화 50년에도 일본을 설득할 한일관계사를 체계화하지 못한 한국 학계와 정부의 무능이 문제다. 동북아 역사재단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한

국학 중앙연구원 등이 한일외교 쟁점을 정리했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전일보는 칼럼으로 1965년 쫓기듯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오류를 지적했다. 6·25전쟁 중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기 한일 국교 수립을 제안했으나 이대통령의 이유 있는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가, 박정희정권에 재차 강권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미국 지역통합정책에 편승한 일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에 유익했다”는 구보다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의 망언을 깔고 한일기본조약을 협상했다. 한국정부는 1910년 경술국치(한일병합)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침략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조약 2조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다”고 합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패전으로 무효라고 확인하며 경술국치 원천무효 주장은 표기하지 않았다. 2010년 5월 일본지식인 100여명은 “병합조약 등은 원래 불의부당한 것이었다.”며 “당초 원천 무효였다는 한국측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라고 성명했다. 그러나 아베총리는 침략 사죄와 미진한 보상 정리를 거부하며, 위안부 피해 사죄와 보상 문제 협의를 2년 끌어왔다. 박대통령의 과거사 사죄 주장이 50년 전 한일기본조약 체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서 혈맹인 미국이 수용한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을 포괄하는 한국 주도의 평화정책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대통령이 ‘한국형 현상타파전략’을 선언하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외교로 한국이 강대국 바둑판의 패감이 어둠을 알려야 할 것이다. [K]

6·25참전 언론인들 ‘호국의 얼’ 되새기다



6월 22일 국방부에서 열린 ‘6·25 참전 언론인 명패 헌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운중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 한영섭 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 이도형 ‘현상과 진상’ 발행인, 지용우 대한언론인회 노설고문, 지갑중 유엔한국참전국협회 회장, 김준하 전 청와대 대변인, 한민구 국방장관, 박기병 6·25 참전언론인회 회장, 이종식 방일영문화재단 상임이사.

박근혜 대통령(중앙)이 참석한 ‘6·25전쟁 제65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는 지갑중 원로회우(일어선 사람). 맨 오른쪽 앉은 이는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청와대 블로그)

국방부 브리핑룸에 명패 헌액

6·25참전언론인 명패가 국방부 신청사 브리핑 룸에 걸렸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6월 22일 오후 3시 6·25 참전언론인(35명)과 종군기자(43명) 78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국방부 기자회견실에 헌액했다. 6·25 참전 언론인 명패 헌판식은 대한언론인회가 발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에는 서울프레스센터에 같은 명패를 헌액한 바 있다.

이번 헌판식은 6·25전쟁에 참전·종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언론인들을 예우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방부를 출입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국난 극복을 위한 선배 기자의 헌신을 귀감 삼아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 함께 재인식하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된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종군기자들의 기사 한 줄 한 줄의 내용이 전쟁의 성과와 그 의미를 잘 전해주고 있다”면서 “이 분들의 이름을 새긴 명패는 나라 사랑의 소중한 증거물”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지켜온 참전 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국민들의 호국 안보 의식을 함양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본회 상담역)은 “전쟁을 겪지 않은 2세들에게 6·25전쟁 참전 기자와 종군기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고 안보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발의했다”고 말하고 “명패에 새겨진 분들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병적기록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민석 대변인을 비롯한 국방부관계자와 김은구 대한언론인회회장, 6·25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 김준하 지갑중 고문, 지용우 부회장, 이도형 이종식 이사,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한국기자협회 박종률 회장, 정운중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6·25참전언론인 명패 헌액 행



명패에 새겨진 명단

6·25 참전 언론인

공대식 김관태 김성환 김용수 김윤덕 김준하 김집 김춘빈 김한길 문준철 박기병 박용운 송두빈 신현구 안광식 안현태 오판룡 유승택 윤양중 이경남 이구열 이도형 이세환 이순기 이종기 이종식 임인흡 정연복 정용기 지연흥 지용우 최창봉 한영도 홍성혁 황대연(이상 35명)

6·25 종군기자

계성일 구본건 김군서 김순강 김석준 김우용 김진섭 김희중 문제안 박남규 박성환 박영식 박영준 박중임 방낙영 서승벽 석보 심종구 예용해 윤종현 이시호 이월준 이윤수 이지웅 이필면 이혜복 임학수 장명덕 전동천 정성관 전승규 정원국 정준모 조창섭 조용하 지갑중 최경덕 최기덕 최원각 한규호 한영섭 함택운 홍윤식(이상 43명)

사는 국내 언론사들이 현장인터뷰기사와 함께 비중 있게 다뤘다.

참전유공자 위로연 건배사 지갑중 원로회우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본회 상담역)과 지갑중(본회 원로회우) 유엔한국전참전국협회 회장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에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주관한 ‘6·25전쟁 제65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초청받아 헤드테이블에 자리를 함께한 박근혜 대통령과 환담했다.

지갑중 회장은 특히 유창한 영어로

건배사를 해 박수를 받았고 박기병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국방부가 6·25참전언론인명패를 국방부 브리핑 룸에 헌액한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엔 한민구 국장장관, 박희모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참전 유공자 및 원로 장성, 보훈단체장 및 회원, 주한 외교단, 한미연합사령부의 주요 지휘관 등 480여명이 참석했다.

한영섭 회우 국방일보 대서특필

국방일보 6월 25일자 6·25 65주년 특집 ‘펜과 카메라로 다시보다’ (13면 전면)에는 한영섭(한국방송동우회 회장)원로 회우의 “목숨 걸고 진실을 전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렸다.

같은 면 하단엔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들의 활동을 박기병 회장 코멘트와 함께 상세히 보도했다. 6월 23일자 문화일보도 6·25 참전언론인회의 활동상황과 박기병 회장의 6·25 참전기를 인터뷰해 실었다. 박기병 회장은 또 6월 24일 오전 9시 국군의 방송 라디오FM과 6월 25일 17시 40분 KBS 2TV에 출연, 생방송으로 6·25전쟁에 대한 참상을 소개했다.



6·25 남북피해자 신고 접수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6·25전쟁 당시 납북피해를 당한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

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①납북피해신고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제적등본 ④납북경위서 ⑤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갖춰 신고인의 거주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전화 1661-6250)이나 홈페이지(www.abductions625.go.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골프는 세가지-클럽, 엘리트, 프로

활자매체인 신문, 잡지 등은 물론 전파 매체의 TV나 라디오 등이 다루는 골프관련기사는 주로 프로골프의 유명경기와 거기에서 활약하는 유명프로골퍼들의 전황과 기록 등이다.

근래 박인비(朴仁妃·26)의 미프로여자골프(LPGA)투어 메이저타이틀인 위민스PGA 챔피언십 3연패 뉴스는 모든 미디어에 대서특필되었고 거기에 우리여자대표팀이 2015캐나다여자축구 월드컵에서 선전, 16강전 진출 소식 등은 가뜰이나 메르스 사태에 시달린 민심을 크게 위로, 고무시킨바 있다.

골프라 하여 모두가 같은 골프가 아닌듯하다. 세계 골프를 관장하는 영국 골프협회(R&A)가 펴낸 ‘골프규칙(Rules of Golf)’의 2012년판은 사상(史上)처음으로 골프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우리네 일반 아마추어골퍼들이 회원골프장인 컨트리클럽에 회원으로 가입, 골프적(籍)을 취득한 후 홈코스에서 플레이하거나 또는 퍼블릭코스를 찾아 돈을 지출하고 골프를 즐기며 사교친목도 다지는 골프행태 전반을 ‘클럽골프’라고 명명했다.

사실 우리네 놀이골퍼패거리나 골프꾸러기들이 돈을 펄펄 써가며 하는 놀이골프덕택으로 천하의 모든 골프장은 경영을 유지하고 골프산업도 지탱되는 것이며 몇몇 프로골퍼집단이 골프장 운영을 돕는 일은 없다.

골프규칙에서의 두 번째 골프는 ‘엘리트 골프’이다.

골프를 놀이 아닌 진짜 경기로 삼는 부류, 즉 골프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애슬리트골퍼들이며 일부 클럽챔피언을 노리는 중년 선수 그리고 골프협회(KGA) 국가 상비군소속 중고생골퍼 등이 하는 골프가 ‘엘리트 골프’이다.

이들의 골프는 놀이, 취미의 차원을 벗어나 부업(副業)이자 준(准)프로골프로 업(up)된 것이며 이들은 프로골퍼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골프규칙 상 세 번째 골프가 바로 ‘프로골프’이다. 골프규칙에서 “다양한 수준의 프로골프”라고 지칭하여 직업적 골퍼집단 전반을 총 망라한 개념이다.

우리의 미디어나 TV등이 주로 보도하는 골프가 바로 이 ‘프로골프’이고 상금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뛰는 프로골퍼들이 하는 상금경기를 진짜 골프 경기로 치고 다룬다.

그래서 박인비 등 유명프로골퍼들이 뛰는 고액 상금의 골프는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이자 흥행쇼이기도 하여 널리 ‘TV골프’라는 높은 격(格)이 부여되기도 한다.

프로골프 융성으로 놀이골프 위축?

박인비 등 프로골퍼들이 해외경기에서 뛰는 목적은 부(富)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인데 미디어는 내셔널리즘을 밑에 깔고 ‘국위선양의 쾌거’, ‘외화벌이의 애국적 역군(役軍)’이라고 추켜고 극찬한다. 이때 이들의 골프는 마냥 선(善)한 것 즉 좋은 것, 착한 것, 길한 것, 옳은 것, 훌륭한 것, 상서로운 것으로 곱게 단장된다.

따라서 박인비, 김효주 등 세계정상급 프로골퍼는 착하고 기특하고 신통함을 넘어 국위선양의 애국자로까지

칭송되는 골퍼이고 인기도 정상급이다.

이에 비하여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일반 아마골퍼들이 취미로 하는 골프는 폄훼되는 편이다. 특히 권력층, 고위공직자들의 골프는 나쁜(惡) 짓 즉 바르지 않고 부도덕한 짓, 법에 어긋나는 짓, 못된 짓, 불길한 짓, 증오스런 짓, 부끄러운 짓인 양 왜곡 인



최영정

- 본회 원로회우
- 전 조선일보 체육부장
- 골프칼럼니스트

고 본다. 필자는 고위공직자들의 골프를 C일보에 스포츠기사로 보도하였고 그들 스스로도 골프에 하등의 죄의식을 갖지 않고 기자의 취재를 기피, 은폐하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해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골프현장에서 취재, 보도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1983년 아놀드 파머(中) 초청 골프 경기후 한장상프로(右)와 필자(左)가 포즈를 취했다.

식된다.

한 예로 참여정부시절 이해찬 총리의 골프로 인한 중도하차사건이 그것을 잘 대변한다.

강원도 양양과 고성일대의 큰 산불이 난 식목일 행사 후의 골프행태로 비난여론에 의하여 총리직에서 물러난 그 사건을 당시 미국LA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이해찬 총리가 등산이나 낚시를 했더라면 문제가 안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서 골프는 권력, 위세, 부패 등과 통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하기야 접대골프는 있어도 접대축구, 접대테니스, 접대등산은 없다.

필자가 1970~80년대 C일보 골프전담기자로 일할 때 한장상(韓長相) 등의 프로골프와 마찬가지로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고관, 국회의원 등 권력층이나 재벌임원들의 놀이골프도 떼떈한 스포츠로 대접받았다

말아달라”는 경호실의 전갈이 있어 내판에는 자제하여 기사를 썼다.

어언 3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골프는 크게 변했다. 구옥희(具玉姬), 박세리, 박인비 등 쟁쟁한 여자프로와 최경주(崔京周) 등 남자프로 등의 놀라운 세계정상제패 등으로 프로골프보다는 마침내 왕년의 오랜 ‘반(反)골프’ 풍조의 벽을 뛰어넘어 골프예찬의 경지로까지 번져 신문지면과 TV화면에 큰 자리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 반면 일반 아마들의 놀이골프의 환경과 여건은 매우 열악해져만 갔다. 놀이골프의 부정적 감정은 결코 호전되지 않았다.

우리 여자프로골프가 세계정상급의 수준까지 발전, 융성해질수록 그와 반비례로 우리네 놀이골프는 사회기풍, 기강, 검소정신의 면에서 활기를 잃어가 위축되어만 가는 기현상을 드러냈다.

공직자골프 解도 아니고 禁도 아니고

박인비의 빛나는 승전보가 신문의 스포츠면을 요란하게 도배질하는가 하면 바로 정치, 사회면에서는 공직자 골프 자제(自制)론과 함께 접대골프의 비리, 부패를 들추어 지탄하는 고발기사가 실리는 아이러니가 이어졌다. 한 골프 잡지는 공직자가 좋아하는 골프를 하려면 “공직자 골프3계(戒)를 지켜라. 제 돈으로, 국외자(局外者)와 그리고 공휴일에만 하라.”의 3계를 지켜도 관운이 나쁘면 골프 저주(詛呪)를 받아 파직될 위험이 크다.

어찌 하찮은 골프놀이 따위에 그 소중한 관직을 건단 말인가. ‘골프 해금(解禁)’이란 말도 ‘해(解)’도 좋고 ‘금(禁)’해도 좋다는, 어찌면 정답이 없는 괴물이라한다. “재직 중 골프를 아예 중단하라”고 충고하는 기사로 주목 받았다.

대기업 삼성(三星)의 ‘사거지악(四去之惡)’에 의외로 접대골프가 들어있어 불륜, 도박, 업무 중 주식거래와 함께 버려져야 할 네 가지 악(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기업 중 가장 많은 골프장을 소유하면서 임직원에게는 골프가 악(惡)이라는 듯 금하더니… 이것은 ‘골프하다’를 ‘골프질 하다’로 부정하는 꼴이 아닐까한다.

어쩌다가 이렇듯 놀이골프가 프로골프와는 반대로 모멸, 수난을 겪게 된 것일까. 골프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스포츠, 대중스포츠로 활성화 하자는 당국의 구호와 업계의 소리를 지면이나 전파에 그대로 실어 장단 맞추는 미디어의 외침 등 모두 헛소리 같다.

거기에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 전 검찰총장, 군장성 등 으리으리한 관록의 명사(?)들이 라운드 중 캐디양에게 집적거렸다가 들통나서 망신당하면서 놀이골프도 덩달아 똑같이 망신당하고 평가절하, 이미지 손상되어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시 말해 프로골프와 놀이골프는 크게 다른, 거의 판판의 분야가 되어 엄격히 구분하여 혼돈하지 말일이다. 프로골프의 융성으로 결코 놀이골프의 위상이 달라지거나 좋아지는 일은 없는 듯하다.

골프장업계가 잘 나가는 여자프로골프의 위세를 빌려서 “골프장에 부가되는 무거운 세금을 감축하라. 골프가 국위선양의 효자스포츠이고 골프장은 그 스포츠를 뒷받침하는 경기장인데 당국이 사치시설로 몰아 중과세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등 억지페의 성명을 내고 이것을 미디어가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 보도한다.

우리 골프장은 18홀 단위로는 530개소에 이르러 과다(?)한 편이고 골프장끼리 경쟁이 치열하여 탈락하는 골프장이 수십 군데나 나왔다.

중소기업계의 상례대로 전 골프장의 1할 즉 60군데쯤은 도산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과세 탓이 아닐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가 집권을 해도 선뜻 골프장의 현 과세를 경감하는 용단을 내리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국문]

溫故知新

백제는 大陸을 경영했다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백제가 중국 대륙을 경영했다는 사실이 ‘삼국사기’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중국과 일본 측 사서에는 그 편린이 보인다. 백제가 중국 대륙에 영토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것은 고려시대의 김부식(金富軾)뿐 아니라 요즘 사학자들 가운데도 많다.

한심한 노릇이다. 이들은 백제가 무슨 수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믿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백제가 중국의 요서지방과 산둥반도를 비롯한 동부 해안지방에 진출하여 그곳을 다스린 강력한 해양제국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 이는 그만큼 연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대의 학자 가운데 이런 사실을 밝혀낸 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의 신경준(申景濬)이 ‘증보문헌비고’에서 백제가 한때 요서와 월주를 차지했다고 썼고, 신채호(申采浩)도 ‘조선상고사’에서 백제가 요서·산동·강소·절강 등지를 차지했다고 썼으며, 정인보(鄭寅普)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중국의 사서 가운데 가장 먼저 이를 언급한 ‘송서(宋書)’ ‘백제전’의 기록을 소개한다.

- 백제국은 본래 고려(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1천여 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 뒤에 고려(고구려)는 요동을 침략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백제는 요서를 침략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백제가 다스리는 곳을 진평군(晉平郡)

진평현이라고 하였다.

비슷한 기록은 ‘자치통감’·‘문헌통고’에도 보이고, 특히 ‘남제서’ 동남이열전 백제전에는 백제가 북위의 대군을 섬멸한 전쟁기사까지 이렇게 나온다. 백제가 남제에 보낸 국서의 한 대목이다.

- 이 해에 (북)위 오랑캐가 또다시 기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그 경계에 들어가니 모대(牟大·東城王)가 장군 사법명(沙法名)·찬수류(贊首流)·해례곤(解禮昆)·목간나(木干那)를 파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오랑캐군을 기습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

북위는 남북조시대 북조의 하나로 선비족 탁발씨(拓拔氏)의 나라이다. 이런 빛나는 백제의 역사를 김부식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조에서, ‘(재위) 10년.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는 단 한

줄로 공개버렸다. 선비족은 중국 북방의 유목민족이다. 그들의 기병 수십만 명이 무슨 수로 바다를 건너 백제로 쳐들어왔단 말인가. 육로로 백제를 공격하려면 고구려를 거쳐야 하는데, 고구려가 순순히 길을 빌려주었을까. 게다가 당시 고구려의 임금인 광개토대왕(廣開土太王)의 뒤를 이은 장수대왕(長壽大王)이었다.

고대사 전문가인 윤내현(尹乃鉉) 박사는 ‘한국열국사연구’에서 ‘남북조시대에 백제가 영토로 삼고 다스렸던 중국지역이 요서, 즉 오늘의 하북성 난하 유역에서 동부해안을 따라 산둥성을 거쳐 강소성 남부까지 이르렀으며, 남쪽의 광서장족자치구 울림군 지역까지 근거지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 백제가 중국의 동부 해안지역에 진출하여 그곳을 지배했다는 사실은 당시

백제의 국력을 알게 해주며, 백제가 해양활동을 활발히 한 국가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동부 해안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황하 중류유역과는 구별되는 문화권으로서 한반도 및 만주와 밀접한 문화교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황하 중류유역의 거주민들인 제하족(諸夏族)에 의하여 동이(東夷)라고 불렸다. 그리고 서한 무제는 위만조선(衛滿朝鮮)의 우거왕(右渠王)을 반대하고 서한으로 이주한 예군(薺君) 남여(南閭) 등 28만 명을 받아들여 지금의 발해만 서부연안 창주지구에 창해군(滄海郡)을 설치하여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국 동부 해안지역에는 한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백제의 중국 동부 해안지역 진출이 쉬웠던 것이다. 또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고구려 유민인 이정기(李正己) 일가가 산둥성 지역에서 치청번진(淄靑藩鎮)을 경영하면서 당 황실에 대항하였다. 그 뒤를 이어 장보고(張保臯) 대사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해상권을 장악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그 전에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를 지켜야 한다. 과거를 모르고 어찌 미래로 갈 수 있겠는가. 역사를 잃으면 미래도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내일의 좌표를 찾아야 한다. [4]

ABC협회 신문부수 公査 결과 발표

신문·잡지·웹사이트 등의 매체량 공사가구인 한국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협회는 최근 일간지 28개사에 대한 2014년분 신문부수 정기공사 결과를 발표했다. ABC협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 종편, 케이블에 참여한 매체사의 유료가구 구독부수를 조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구독률 심사자료로 제출했다.

이번 공사결과에 따르면 28개 일간지 중 신문협회 회원사 18개 신문의 발행부수는 전년대비 42만 214부가 줄어 6.7%의 감소를 보였으며 유료부수는 8,953부가 줄어 0.2%가 감소했다. 이는 2013년도분 유료부수가 전년대비 3.8% 감소한 것에 비해 2014년도분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사는 종합편성채널 사용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 18개 신문협회 회원사 가운데 11개 회원사는 유료부수가 늘었다. 문화일보는 지난 5년간 유료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ABC공사 방식을 둘러싸고 신문업계 내에서 논란이 있던 후 처음 실시된 공사여서 특히 관심을 모았다. 그간 ABC협회는 정관 개정 및 회비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등 협회 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공

2014년분 정기공사 결과 (총 25 개지)

(가나다 순)

신문명	발행부수	유료부수
강원일보	65,000	43,436
국민일보	201,322	141,648
동아일보	916,546	737,053
매일경제	725,701	553,823
머니투데이	75,276	57,494
문화일보	170,460	149,401
서울경제	81,725	54,977
서울신문	161,131	110,217
스포츠동아	169,744	136,266
스포츠조선	219,531	178,409
아시아경제	35,000	26,016
영남일보	71,796	47,826
이데일리	30,194	15,025
일간스포츠	190,774	135,629
전자신문	62,359	50,148
조선일보	1,673,049	1,294,931
중부매일	12,535	5,909
중부일보	15,210	8,868
중앙일보	1,056,946	795,209
한국경제	505,263	350,952
한국일보	199,613	141,375
헤럴드경제	56,988	40,898
KOREA JOONGANG DAILY	19,013	16,655
The Korea Herald	30,973	21,542
THE KOREA TIMES	20,701	14,852

사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사 과정에서 회원사와 ABC협회 사이에 마찰이 크게 줄고 전반적으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됐다.

사우회 소식



사우회 사무실 개소식

한국일보

한국일보사우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와이즈빌딩 내 한국일보 신사옥에서 한국일보 사우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이종승 사장을 비롯 이재형 사우회 회장, 홍원기 명예

회장, 박실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 기념 떡을 잘랐다.

역대 사우회장에게 듣는다

KBS

KBS 사우회(회장 전 봉찬)는 6월 1일자로 사우회보 제158호를 발행했다.

월간 발행의 이번 158호는 역대 사우회장들의 회고담이 돋보인다.

6. 7대 이범경(5면), 8. 9대 서병주(5면, 본회 회우), 11대 김수웅(6면, 본회 회우), 13대 정근준(6면)회장 등 5명의 역대회장이 회장 재직 시의 일화를 소개했다. 지난 5월 판문점을 방문해 안보체험을 한 소식이 화보와 함께 실렸고 2005년 6월 정년퇴임한 5. 6회 모임과 미소회(米笑會) 소식도 이채롭다.

언론가 소식

경향신문 이동현 사장 선임



경향신문은 지난 6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동현 사장 후보자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동현 신임 사장은 1993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종합편집장, 특집기획부장, 스포츠경향 광고국장, 상무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8년 6월14일까지다.

한국일보 제2창간 선포식

한국일보가 창간 61주년을 맞아 재창간 선포식을 갖고 “디지털 미디어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매체



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은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재창간 기념사를 통해 “종이신문의 위기와 언론 환경의 급변에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할 변하지 않는 가치는 바로 저널리즘 정신”이라며 “사람 중심의 뉴스와 콘텐츠로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정책이 개발되고,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丁口竹天과 四字成語

윤임술

·전 신아일보 편집국장
·전 한국언론연구원 원장
·전 부산일보 사장
·현 일경문화재단 이사장



지금으로부터 약85년전 농촌의 보통학교(초등학교)는 6년제가 아닌 4년제도 더러 있었다. 나는 이때 철새도래지로 널리 알려진 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 주남저수지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20여 가구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락 주남촌(注南村)에 살면서 5, 6학년이 없는 4년제인 대산(大山) 보통학교에 다녔다. 4학년을 마치고 이웃 김해 이북면(二北面)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10리가 훨씬 넘는 이북면 학교는 못하고 서당에서 글을 배우기도 했다.

서당에서는 천자문(千字文)을 다배우고나면 동몽선습(童蒙先習) 명심보감(明心寶鑑) 소학(小學)으로 가지만 대개 명심보감에서 끝을 맺고 농사일을 거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마산(馬山)이나 부산(釜山)에 있는 상급학교인 중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은 한 명도 못갔다.

서당에서의 공부는 훈장(선생님)과 아이들의 나이도 다르고 키도 크고 작고 실력도 고르지 못한 것을 한방에 같이 섞어서 앉아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도 했다. 사리(事理)에 맞지 않거나 엉뚱한 말이나 답변이 튀어 나오면 훈장이나 글을 좀더 배운 선배 아이들이 “그것은 정구죽천(丁口竹天)이야”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반박도 한다. 시골 늙은이들의 작품인지,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인지 모르지만 丁(정)口(구)竹(죽)天(천) 네 글자는 가소(可笑) 두 글자가 되어 가소롭다는 말이 된다는 것을 나는 며칠 후에 설명을 듣고 알았다. 고무래 정(丁)자에 입 구(口)자를 붙이면 옳을 가(可)자가 되고 대 죽(竹)자를 하늘 천(天)자 위에 얹으면 웃음 소(笑)자가 되어 당당한 가소(可笑) 두 글자가 되기 때문이다. “야 이친구야 가소롭다” 보다 “정구죽천이야” 하면 여유가 있어 보이고 말의 무게가 있어 보인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벽촌의 선비들의 애교가 담긴 글장난 같지만 그들의 자존심이 담긴 정확한 사자성어(四字成語)다.

각설하고 요즘 한문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오히려 많이 알지 못할 것 같은데도 출세한 사람들이 사자성어를 자주 내놓는 것을 본다.

새해벽두에는 교수들이 한해의 전망을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정치하는 인사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해 결심을 나타낼 때 사자성어를 내놓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칼로 베어내고 뼈를 잘라 버리겠다)이라는 잔인하고 굳은 결심을 표현한다.

문제가 생겼을때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결과를 얻겠다고 표현하는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쌓인 글귀도 있는데 국회법개정에 논란이 벌어지고 대통령에게 ‘헌법공부’ 운운하고 ‘호들갑’이라는 말이 보도되는가 하면 메르스 대책의 우왕좌왕으로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을때도 메르스는 공기 감염이 안되니 안심하고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하라고 권장 하더니 공기 감염이 된다는 설이 나도는 등으로 국민들이 공포심에 싸여있기도 했다. 이런 국가 비상시에 기민한 대처를 하기위해 최근에 발족한 국민안전처는 어디 있는지 그 존재가 희미하고 크다고 할 수 없는 작은 우리나라에 부총리 어르신을 2분이나 뒤흔치고 있어도 눈에 띄는 큰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長江 선박사고는 400여명이 수장되었지만 1주일도 채 안되어 배를 끌어올려 사건을 마무리한다는데 세월호사건은 1년이 지나가도 완결이 안된 보도들이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사건건들의 처리가 정구죽천(丁口竹天), 가소(可笑)로움을 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해석하기 어려운 사자성어도 한문을 제대로 배우는 교육풍토가 돼야 실용화가 되고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사전을 뒤져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어려운 사자성어를 내던져놓고 자기만족을 하는 것도 정구죽천이 아닌가. 지금 옛날 선비들은 지하에서 어떤 사자성어를 읊고 계실까.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1

통곡식품 먹으면 장수한다

겉껍질만 벗긴 상태의 곡물(grain)인 통곡(統穀)을 장기간 섭취하면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은 최근 기욤을 제거하지 않고 빵은 통밀가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의 역할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섬유소는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제과정을 통해 버려지는 껍질과 배아 속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 등 몇 가지 중요한 비

루를 비롯해서 오트밀, 현미 등으로 만든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수한다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영양학과 선(Qi Sun) 교수 팀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선 교수 팀은 1980년대 중반부터 두 가지 장기연구과제에 등록된 간 호사와 의료요원 118,000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통곡섭취 등 식생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했다. 26년의 연구기간 동안 조사대상자 중 27,000명이 사망했는데 이들 중 매일 통곡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그룹이 정제된 곡물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30%정도 낮았으며 특히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 다른 어느 질병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 교수는 장기간 매일 1 온스(28g) 정도의 통곡 음식을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사망 위험이 5%,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은 9% 정도 감소시킨다며 이는 주로 겨(bran) 부분에 있는 섬유소

리고 항산화제가 들어 있다.

밀, 벼, 보리, 귀리 등 곡물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물을 보호하기 위한 겉껍질인 겨, 싹을 틔우는 배아(germ), 배아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담고 있는 내배유(內胚乳·endosperm)이다. 이들 곡물은 도정(搗精) 과정에서 겨와 배아 부분이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열량이 높은 내배유 부분만 남게 된다. 흰 가루와 흰 쌀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밀 빵, 오트밀, 현미밥, 팝콘 등은 세 가지 구성 성분을 다 가지고 있다.

미국 민간 영양운동단체인 통곡위원회(Whole Grains Council)는 최근 곡물에서 겨와 배아를 제거하면 곡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25%와 17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소실된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통곡 음식이 배를 부르게 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당질의 절반을 통곡으로 하되 가급적 세 끼로 나누어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잣향기 짙은 숲속에서 기념촬영.

잣향기 푸른숲에 취하다

본회산악회 축령산 탐방 산행

대한언론인회산악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6월 12일 29명의 회우가 가평의 ‘축령산 잣향기 푸른숲’을 다녀왔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산림휴양공간인 ‘축령산(879m) 잣향기 푸른숲’은 산행도 하고 숲길 탐방도 할 수 있는 힐링 산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면적 153ha의 산지에 수령 80년 이상

된 5만여 그루의 잣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잣나무 군락지 ‘잣향기 푸른숲’ 탐방에 나선 회우들은 숲길따라 정상을 다녀오는 팀과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트레킹코스인 숲체험 팀으로 나누어 산행을 했다. 산행을 마친 회우들은 오찬 장소인 ‘천지관’에서 즐거운 뒤풀이 모임을 가졌다.

인종청소 비극의 현장 모스타르를 가다

지금 중동에서는 IS와 시리아 이라크가 밤낮 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 이슬람과 수니파, 시아파가 서로 얽힌 종교전쟁이다. 그들 뒤에는 강대국들이 조정을 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껏 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했듯 종교간, 민족간의 전쟁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더욱 어렵다. 중동전쟁이 그러했고 유고슬라비아 전쟁 또한 종교간의 세력다툼에서 비롯됐다. 최근 필자는 ‘인종청소’로 불리어지는 보스니아 내전의 현장 ‘모스타르’를 찾았다.

‘보스니아’는 아직도 뇌물 통해

‘모스타르’를 가기 위해서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국경에서 비자를 받아야한다. 우리는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거쳐 헝가리를 떠난지 8일 만에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국경에 도착했다. 비자는 국경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받았다. 운전기사가 여권을 가지고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 일행은 버스 안에서 한 참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운전기사가 나오더니 캔 맥주와 물병 등 20여개를 가지고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20여분이 지났을까. 운전기사가 나오면서 “지금도 이곳을 통과하려면 돈이나 술, 물과 같은 뇌물을 줘야 빨리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버스는 비자를 받고 30여분을 더 달렸다. ‘모스타르’시가 멀리서 보인다. 모스타르는 보스니아에서도 한적한 조그만 도시다. 북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유학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일행은 도착하자마자 터키식 케밥으로 점심을 하고 ‘모스타르’ 다리를 구경했다. 우리가 찾은 시각은 낮 12시경. 땀별이 내리쬐는데도 다리위에는 많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 관광객이 그때의 현장을 보기위해 세계 여러

김휴선 · 본보 회우·전 MBC보도국 부국장



‘모스타르’ 다리 앞에 선 필자.

곳에서 찾아온 것이다. ‘네레트바(Neretva)강’을 동서로 연결하는 아치형 다리는 빼어난 곡선미를 보여주고 있었다. 폭이 5m, 길이가 30m정도이고 높이가 25m라고 한다. 강물은 말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다리 위에서는 관광객이 주는 몇 푼의 팁을 받고 젊은 이들이 강물 아래로 뛰어 내리는 묘기를 부린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며 환호를 지른다. “매년 뛰어 내리다가 물에서 한두 명씩은 죽는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모스타르 다리

‘모스타르’라는 말은 네레트바강을 지켜주는 ‘과수꾼’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한다. 1993년 보스니아 내전 때 크로아티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

2004년에 복원됐고 그 다음 해인 200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강바닥에 떨어져 가라앉은 조각들을 일일이 찾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길거리는 대부분 조약돌로 깔려져 있고 양옆으로는 군데군데 음식점들이 있다. 토산품과 문구류, 선물용품도 팔고 있었다.

이곳저곳에는 ‘Don’t Forget ‘93’이란 표지석이 길바닥에 박혀있다. ‘93년 전쟁을 잊지 말자는 뜻이다.’ 민족간의 화해의 징표로 세워진 이 ‘모스타르 다리’는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했던 곳이다. 당시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쪽은 크로아티아계의 가톨릭이, 동쪽은 세르비아계의 정교도가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

왔다.

발칸의 전쟁은 유고슬로비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티토대통령 시절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6개 사회주의 연방으로 구성된 나라였다. 1980년 티토대통령이 죽고나서부터 분열되기 시작했다.

슬로베니아를 선두로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 유고연방을 구성했던 나라들이 차례로 하나둘씩 독립을 선언했다. 이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가 독립을 선언하자 세르비아인들이 핍박을 염려해 이슬람을 믿는 보스니아인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면서 내전이 시작됐다. ‘인종청소’를 한 것이다. 결국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의 종교전쟁은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를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보스니아 내전(Bosnian War)은 1992년 4월에 시작해서 1995년 12월에 끝났다. 20세기 인류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으로 기록된다. 430만 인구 중 27만명이 사망했으며 2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57개 도시가 파괴됐다. 50여개의 마을이 불에 탔다. 내전의 희생자중 상당수는 ‘인종청소’에 의해 집단학살을 당했고 많은 부녀자들은 성폭행 희생자가 되었다. 거리에는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이 뚜렷했다. 건물마다 총탄 흔적이 남아있고 아직도 복구가 덜 된 곳은 유령의 집처럼 곳곳에 서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푸르스트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스니아 ‘모스타르’ 여행은 1993년이란 시간과 그 시간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 것 같다. [4]

사우회장 초청 간담회

본회, 퇴직언론인 센서스 등 협조 당부

주요 언론사 사우회장 초청 간담회가 6월 23일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려 대한언론인회와 사우회 간의 친목증진과 언론발전을 위한 사업협조 등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운종 상임이사는 대한언론인회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했고 김은구 회장은

“사우회는 한지붕 밑에 산 동료들의 모임이지만 대한언론인회는 다른 지붕 아래 살며 현역시절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했던 퇴역동료들이 모인 정통 단



사우회장 초청간담회에서 김은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체”임을 강조하고 친목도모와 언론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을 상시체제로 이뤄나가자고 당부했고 사우회장들도 공감을 표했다.

특히 대한언론인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과 공동사업으로 착수한 ‘퇴역 언론인 실태조사’에 사우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실제조사의 실무팀인 언론재단의 이상기 차장, 글로벌 리서치(실무작업 업체)의 강수영 부장, 김현희 대리 등이 배석해서 실태조사의 목적, 조사설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사우회장들이 이 사업을 돕기 위해 사우회원명부(성함, 퇴직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파일로 대한언론인회에 보내주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우회장은 다음과 같다.

- 경향신문 김명수 회장
- 국민일보 이형용 회장
- 동아일보 김태선 회장
- 서울신문 김소선 회장
- 한국경제신문 최귀조 회장
- 한국일보 제재형 회장
- 헤럴드 윤익한 회장
- 연합뉴스 김덕성 회장
- CBS 마권수 회장
- KBS 전봉찬 회장
- SBS 김수웅 회장

‘건강포럼’ 폭염기 휴강합니다

상반기 ‘건강포럼’이 회우님들의 성원 속에 잘 진행 됐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포럼’은 7, 8월 폭염기에는 관례

대로 휴강하고 오는 9월에 더 유익하고, 더 실용적인 내용의 강의를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포럼 담당 : 이보길(회원사업위원장)



농어업은 환경과 미래 생명산업의 뿌리입니다. 한국 농어업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습니다.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제소



박선영(물망초 이사장) 회우=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포로송환을 규정한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어 그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국군포로 500여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케이블채널 환경TV 사장 취임



박진열(전 한국일보 사장)회우= 지난 5월 10일 환경 전문 케이블채널 환경TV 사장에 취임했다.

한미관계주제 시사간담회



봉두완(한미클럽 회장) 회우= 6월 10일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에서 ‘격동하는 동북아와 한미관계’를 주제로 시사간담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윤덕민(국립외교원장), 김태호(성균관대학교수)씨가 주제 발표를 했다.

관훈 저널 ‘미니 회고록’ 기고



성병욱(전 중앙일보 주필)논설위원= 관훈저널 2015년 여름호 ‘미니 회고록’에 ‘2년만에 세 대통령을 취재하다’ 제

하로 기고.

(재) 통일과 나눔 펀드 출범식



안병훈(통일과 나눔재단 이사장)회우= 7월 7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펀드 출범식을 갖는다. 이 모임은 거래의 염원인 통일에 대비해 통일과 나눔 펀드를 통해 국민의 통일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모은다는 것이다.

학술대회 진행 말아



윤재홍(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회우= 지난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에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한 ‘효용성과 정의·민주주의와 정치 참여, 소통에 대한 성찰’ 주제의 학술대회에

서 사회자로 ‘선거와 정치’ 분야의 토론을 진행했다.

6·25전쟁 납북자신고 관련 인터뷰



이태영(전 중앙일보 편집국 섹션국장)상담역= 6월 25일자 국방일보 9면에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로 6·25전쟁 납북자신고 관련 인터뷰. 이상담역은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한 고 이길용 기자의 3남이다.

‘광주문학’에 시 5편 실려



이학주(시인·전 한국경제 편집부장)회우= 한국문인협회 경기 광주시지부가 발행하는 광주문학에 해학 시 ‘배꼽 빠진 세상이야기’ 등 5편의 시를 올렸다.

헌정회원로회의 부의장 재선출



정재호(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원로회우=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재 선출됐다.

헌정회 원로회의의 위원은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 3부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헌정회장을 역임했거나 헌정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 50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임기는 2년이다.

드라마페스티벌 업체선정 심사위원장



정창기(전 KBS 기획보도실장)편집위원= 지난 6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있는 ‘2015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사업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은 오는 10월 1일 경남 진주에서 개막된다.

제17회 장영실 과학상 시상



제재형(한국일보 사우회장)고문= (사)과학선현 장영실 선생 기념사업회 상임고문으로 지난 6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된 제17회 장영실 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공식심사보고를 하고 정근모 회장과 함께 시상했다.

弔辭

정재도 선배 영전에

유한준(본보 편집위원·시인)

녹음방초 계절에 하늘나라에 드신 님이시여! 일제 말기인 1944년 헌책방을 뒤져 한글 교본을 찾아내 독학으로 깨친 한글학자, 해방 후 21세 어린 나이에 ‘우리말 선생님’으로 공직자들에게 ‘가갸거겨’ 일깨워 주시고 호남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에서 기사 곱게 다듬어 주신 열정, 한글 연구로 정진하시다가 홀연히 떠나시다니 부디 영면 하옵소서!

두꺼비 한 마리(소주 한 병) 안주도 없이 드시다 갑자기 이마를 받아(헤딩) 별을 붙여 주시던 님, 취재원을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흘리시던 분, 받들어 시행(취재 보도)하면 퇴근 후 두꺼비 회식열고 이마에 별 두어 개 또 붙여 주시던 자상함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신문사 떠난 이후에도 20여년을 색동회와 눈술회 모임으로 격월간 계속 담론 즐기셨는데, 이젠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포 고택 문패도, 도장도 ‘정재도’ 한글로 쓰신 분, “글과 말이 번듯해야 뜻도, 나라도 번듯하지. 항상 신문과 더불어 살면서도 신문을 대할 때마다 언론이 우리 말글을 잘 못 쓰게 하는 건 아닌가 하여 안타깝다”던 님, 한글사전 열개를 바로 세우려고 노심초사 마지막 불꽃을 태우시다 홀연히 떠나시다니 허무할 따름입니다. 한글 바로 알고 옳게 쓰기를 종교보다 더한 신앙으로 삼아온 기백, ‘귀코목과’ 단어가 없건만 ‘이비인후과’로, ‘언발에 오줌누기’를 ‘동족방뇨(凍足放尿)’라 한역하고, 푸른 하늘은 없는데 창공, 창천, 청천 같은 말로 버젓이 사전에 올라 있으며, 틀린 단어가 무려 600여 가지가 넘는다고 개탄하신 님, 사전이 거짓말을 가르쳐 준다고 일갈하신 한글학자, 할 일 많은 사람은 늙을 새도 없다던 선배, 치매 증세에 다 건강도 전과 같지 않으니 나이 탓이야 하시던 말씀... 엇그제 같은데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이 “신문을 하려면 정재도가 필요하다”라며 편집국장에게 청한 일, 호남신문 교정부장 시절, 노산이 한글학회로 보낸 일화는 학회에 전설처럼 전해옵니다.

한 평생을 청빈한 언론인이자 한글학자로 소탈한 삶을 살아오신 님, 우리 말글 사랑 탐 쌓고 91세 천수를 누리시고 천상으로 떠난 기러기(후배들이 생전에 붙여 드린 별호) 님이시여! 인명은 재천이나 오호애재라! 님의 영정 앞에 분향재배하옵고 황천후토(皇天后土) 신기보우(神其保佑) 하옵기를 삼가 빌었나이다. 세속의 사단칠정(四端七情) 다 내려놓으셨으니 훌훌 털고 승천 영생하옵소서!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5월 31일 부터 6월 26일까지)

협찬금 : 김경중 회우 = 30만원
이병훈 이사 = 30만원

강용식 (14, 15)	손일근 (14, 15)	제재형 (14, 15)	한기호 (14, 15)
고두현 (15)	송경섭 (15)	조규진 (14, 15)	함정훈 (14)
고명진 (15)	송정제 (14, 15)	조덕동 (14, 15)	호영진 (14, 15)
고학용 (14, 15)	송호창 (15)	조영서 (14, 15)	홍용수 (13, 14, 15)
공대식 (15)	신대근 (14, 15)	조재린 (15)	홍원기 (15)
구건서 (14, 15)	신동철 (14, 15, 16)	최귀조 (15)	홍진태 (14, 15)
권기진 (15)	양희부 (14, 15)	최대훈 (입회비)	※ 미상 (6/16,
김경중 (15, 16)	엄병윤 (14, 15)	최영정 (14, 15)	60,000원)
김길홍 (15)	유진수 (15)	최재욱 (14, 15)	미상 (6/24,
김두호 (15)	윤기병 (14, 15)	최정호 (14, 15)	30,000원)
김병무 (14, 15)	윤용호 (14, 15)	최택만 (14, 15)	미상 (6/25,
김성배 (15)	이근양 (15)	한강수 (15)	30,000원)
김성환 (20)	이동화 (15)		
김수남 (14, 15)	이동훈 (15)		
김승웅 (14, 15)	이병훈 (15)		
김영범 (14, 15)	이성준 (14, 15)		
김종현 (14, 15)	이원창 (14, 15)		
김춘빈 (14, 15)	이자현 (14, 15)		
김해도 (14, 15)	이재승 (14, 15)		
김후란 (15)	이정원 (15)		
노재성 (13, 14, 15)	이종식 (14, 15)		
류종현 (입회비)	이준호 (15)		
박갑술 (15)	이준우 (16)		
박기병 (14, 15)	이태교 (14, 15, 16)		
박동은 (15)	이형균 (15)		
박미정 (14, 15)	임상학 (14, 15)		
박순신 (14, 15)	임판호 (14, 15)		
박영길 (15)	정용석 (14, 15)		
박용배 (14, 15)	정운중 (15)		
박응칠 (15)	정운택 (14, 15)		
서병호 (14, 15)	정재호 (15)		
서정혁 (15)	정진규 (14, 15)		
소재필 (15)	정형수 (14, 15)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김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주소 변경 ▶

고덕환 회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378-10 평산하이츠빌 8동 201호
구건서 회우= 서울 은평구 진흥로1길 19 (역촌동 성은 하이빌 301호)
김경중 회우= 휴대전화 011-9159-8570
김재일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87 433동 502호 (우 448-972)
오건환 회우= 휴대전화(회원수첩) 010-4701-5358로 정정
이향숙 회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64 1020동 106호 (상계동 주공 아파트)
조봉균 회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27 은빛마을 614동 304호 (우 412-748)
최재욱 회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47번로 11 포스힐타운 303동 504호 (우 446-566)



이동 수단의 혁명을 가져온 **원의 발명**



모바일 금융의 기준을 바꾸는 **원의 발명**



Real Mobile Bank i-ONE뱅크

스마트 금융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은행의 발명! Real 모바일 은행 i-ONE뱅크와 만나면 편리한 은행 업무부터 전문적인 금융서비스까지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거래**

**모바일에서 바로
가입하는 금융상품**

**자산설계부터 지출관리까지
도와주는 금융매니지먼트**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권업갑사건 심의제 제2015-1403호(2015.08.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명세장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해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형성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행동 위한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전 세계 대학생 올림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UNIVERSIADE GWANGJU 2015 ★★★★★

7. 3. ▶ 7.14. (12일간)



UNIVERSIADE GWANGJU 2015 ★★★★★

장 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광주·전남·북 일원 주요 경기장

종 목 : 21개(정식 13개, 선택 8개), 170여개국 2만여 명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 수지
Suzy (Promotional Ambassador of 2015 Gwangju Universiade)

Suzy

